

박사 학위 논문

한국 노인의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3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이미성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진수

한국 노인의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n Elderly People's  
Political Orientation on the Movements for Right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이미성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진수

한국 노인의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n Elderly People's  
Political Orientation on the Movements for Right

위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이미성

이미성의 정책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 한국 노인의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이 미 성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층집단의 사회정치적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인의 정치정향에 근거한 정치차명가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치적 태도와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정향이라는 문화적 개념에서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국노인의 노인권익운동 현황을 짚어보고, 차후 나아가야 할 노인권익옹호활동의 내용과 노인 단체들이 사회적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유권자 집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정향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 3가지 요인 모두 부분적으로 노인권익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향분석 결과, 현재의 정책과 법률은 선거에서의 투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노인층의 지지표명이나 노인단체 가입활동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로서의 권익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정향 분석결과는 노

인의 권익신장역할을 위해 집회나 시위, 지지표명, 노인단체 가입활동 등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함으로서 권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적 정향의 분석결과로는 현 정책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정책이 입안되는지 여부가 투표참여에, 또한 민주적인 정책입안과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역할 수행은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지표명, 노인단체 가입활동 등의 적극적인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분석을 통해 현재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투표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지만, 앞으로의 노인권익을 위한 활동에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 지지를 표명하거나 권리신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그 제언으로 노인이익단체의 노인권익운동으로의 활성화 지원 방안마련, 입법부 및 행정부에의 접촉 활동과 여론 및 노인스스로의 자의식 고취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정치정향, 노인권익운동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	4
제 1 절 정치정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1. 정치정향의 개념 .....	4
2. 정치정향의 구성요소 .....	6
제 2 절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8
1. 정치참여의 개념 .....	8
2. 정치참여의 구성요소 .....	10
제 3 절 노인권익운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4
1. 노인권익운동의 개념 .....	14
2. 한국의 고령화와 전통적 정치행태 .....	15
3.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	21
4. 외국의 노인권익운동 .....	26
제 3 장 연구설계 .....	37
제 1 절 연구모형 .....	37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	37
1. 연구문제 .....	37
2. 연구가설 .....	38
제 3 절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	39
1. 정치정향 .....	39

2. 정치참여 .....	40
3. 노인권익운동 .....	40
<b>제 4 장 실증분석 .....</b>	<b>42</b>
제 1 절 표본의 특성 .....	42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	42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	44
제 2 절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	53
1. 타당성 분석 .....	53
2. 신뢰성 분석 .....	55
제 3 절 연구가설의 검증 .....	56
1. 정치정향과 노인권익운동 .....	56
2.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	58
3. 정치참여와 노인권익운동 .....	60
4. 정치참여의 조절효과분석 .....	62
제 4 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	67
<b>제 5 장 결론 .....</b>	<b>70</b>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70
제 2 절 정책적 제언 .....	76
<b>【참고문헌】 .....</b>	<b>81</b>
<b>【부 록】 설문지 .....</b>	<b>84</b>
<b>ABSTRACT .....</b>	<b>88</b>

## 【 표 목 차 】

[표 2-1] 2000년 정치참여실태	12
[표 2-2] 기대수명의 증가 추이	15
[표 2-3] 노인인구 및 노령화 지수의 증가 추이	16
[표 2-4] 부양지수의 변화추이	17
[표 2-5] 한국의 인구증가와 유권자 비율의 증가	18
[표 2-6] 연령별 유권자 비율의 증가	20
[표 3-1] 측정항목	41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44
[표 4-2] 성별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45
[표 4-3]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46
[표 4-4] 연령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47
[표 4-5] 연령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48
[표 4-6] 학력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49
[표 4-7] 학력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50
[표 4-8] 평균수입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51
[표 4-9] 평균수입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52
[표 4-10] 요인분석 결과	54
[표 4-11] 신뢰성 검증 결과	56
[표 4-12] 요인 간 상관행렬(1)	57
[표 4-13] 정치정향과 노인권익운동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58
[표 4-14] 요인 간 상관행렬(2)	59
[표 4-15]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60
[표 4-16] 요인 간 상관행렬(3)	61
[표 4-17] 정치참여와 노인권익운동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62
[표 4-18] 정치참여 조절회귀분석 결과(1)	64
[표 4-19] 정치참여 조절회귀분석 결과(2)	65
[표 4-20] 정치참여 조절회귀분석 결과(3)	66

[표 4-21] 연구모형검증 및 가설채택 (1) .....	67
[표 4-22] 연구모형검증 및 가설채택 (2) .....	68



## 【 그 립 목 차 】

<그림 3-1> 연구모형 ..... 3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세계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노인 집단의 사회정치적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2018년에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상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 등의 현상과 맞물리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및 서구에서의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세력화 현상은 20세기 초부터 나타나 현재 상당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관련 단체는 1,000여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는 세계최대의 노인단체로서 활발한 정치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변 사태법,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유사관련법제, 자위대 이라크 파견 등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불안을 느낀 고령층의 정치세력화와 이익집단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들의 정치세력화의 형태는 정당 결성 또는 NPO 조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유럽 역시 다양한 노인 단체들이 사회적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유권자 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1990년대부터 인구·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많은 수의 노인들이 공적 노후 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일부 저소득계층과 심신이 허약한 노인에 대한 보호에 집중되고 있어서 인구고령화가 유발하는 총체적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정치정향에 근거한 정치참여가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치적 태도와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정향이라는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 노인의 권익운동 현황을 짚어보고, 차후 나아가야 할 노인권익옹호활동의 내용과 노인 단체들이 사회적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유권자 집단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동질집단으로서 우리나라 수도권에 위치한 대도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 중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사회복지관 공동체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와 특성을 설문을 통해 살펴보고, 문헌적 고찰을 통해서 한국 노인들의 정치적 행태의 특성을 정치정향이라는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범위를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논문의 목차에 따라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정치정향과 정치참여의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소 및 이론적 논의, 노인권익운동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간행물, 국내외 학술지 및 학위논문, 국가기관 내 자료 등을 통해 문헌적 연구를 조사하였다.

제3장은 연구 설계의 장으로 연구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고, 실증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설정, 제시하였으며,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상관관계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였고, 추가분석으로 t-test와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본 연구가 지닌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정치정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정치정향의 개념

정치정향이라는 말은 정치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정치정향에 관한 연구 또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정향의 개념 및 분석 범위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 장에서는 정치정향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Almond(1963)는 “모든 정치체계가 정치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행동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정향(定向 : orientations) 속에 묻혀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정치체계 구성원 개개인이 지니는 정치정향에 의해 사회전체의 정치문화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정치문화의 개념적 유형을 3가지로 나누고 있다.

#### 1) 지방형 정치문화(Parochial Political Culture)

지방형 정치문화 사회에서는 전문화된 역할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족의 장은 정치, 경제, 종교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행사하며,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정향은 종교적, 사회적 정향과 구별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지방형 정치문화에서는 정치정향의 4가지 차원에서의 감정적, 인지적, 평가적 정향이 모두 낮게 나타난다.

#### 2) 신민형 정치문화(Subjective Political Culture)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정치체계 자체와 정치체계의 산출 즉 정책에 대한 정향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투입 및 자신에 대한 정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민형 정치문화 속에서의 사회구성원들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는 데는 민감하지만 자신이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통한 정책형성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 3) 참여형 정치문화(Participant Political Culture)

참여형 정치문화에서는 사회구성원이 정치체계뿐 아니라 투입과 산출의 정치과정 그리고 정치과정의 주체로서 자신에 대한 높은 정향을 지닌다. 참여형 정치문화에서의 시민들은 보다 자신들의 활동가적 역할에 대한 정향성을 강하게 지니게 된다. 그러한 정향성이 현존하는 정치체계 및 투입산출에 대한 궁정적 수용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 거부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정책의 주체이고 자신들을 위한 정책수립에 보다 민감하며 적극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정치체제 자체와 그 체제속의 여러 대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체제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Almond & Verba, 1963).”고 규정함으로써 정치정향이 곧 정치체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Easton & Dennis(1967)는 정치정향이란 일정한 정치체계 내에서 구세대로부터 신세대로 전달되는 내용을 말하며, 이 내용은 정치 지식, 정치적 태도 그리고 정치적 평가의 기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즉 한 정치체(政治体)의 구성원들이 참여적인 정치정향을 가질 때 그 정치체(政治体)의 정치문화는 참여적이 되며, 이는 곧 그러한 정치체계의 민주주의 발전을 조장하는 기반이 된고 할 수 있다.

이정식(1983)은 정치정향이 곧 정치과정을 인식하는 사실이며, 그러한 사실들이 어떤 상황에서 형태를 갖추어 구조화 될 때 비로소 정치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범준(1986)은 정향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일정한 행동성향, 즉 어떤 자극에 대하여 일정한 반응을 보이면서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라 하였고, 정치정향이란 정치적 자극이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치적 대상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 성향을 뜻한다고 하였다.

조주복(1987)에 따르면 정치정향은 정치체제나 정치과정, 그리고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의 정치형태를 말하며, 정치정향은 집합적인 정치체제사와 그 체제 각 구성원의 인생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안기성(1997)은 정치정향이란 “특정 정치체제 구성원들 사이의 정치에 대한 개인적 태도와 지향성”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학자마다 정치정향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이 조금씩 다르며, 정치정향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의내리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문화, 정치의식, 정치적 태도 등과 같은 개념들과 유사하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명확한 구분 또한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정치정향이란 정치적 상황 및 문제에 대해 개인이 갖는 정치적 태도 및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진행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태도는 미래의 정치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정치정향은 정치체제 내에서 개개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정향의 중요성 내지는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정치정향의 구성요소

정치활동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의미하는 정치정향의 구성요소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Almond & Verba(1963)는 정치정향의 유형분류를 Parsons & Shils(1951)의 연구로부터 시사 받아, 정치체제와 체제의 역할, 역할의 수행자, 정치체제의 투입과 산출 등에 대해 인지적 정향(Cognitive Orientation), 감각적 정향(Affective Orientation), 평가적 정향(Evaluation Orientation)이라는 3가지 정치정향 유형을 제시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즉 인지적, 감각적, 평가적 요소는 각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향의 다른 측면을 나타내며 상호 보완적이다. 인지적 요소는 지각에 의해, 감각적 요소는 느낌에 의해, 평가적 요소는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인지적, 감각적 정향을 결합하여 선택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이다(Parsons & Shils, 1951).

Almond & Verba(1963)는 Parsons & Shils(1951)의 준거를 바탕으로 정치정향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1) 인지적 정향(Cognitive Orientation)

인지적 정향은 경험적 신념에 의한 정치적 성향과 태도를 의미한다. 즉 일반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체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다. 예를 들면, 일본인 대부분은 정부가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거나, 또는 대다수의 독일인들이 그들의 경찰이 공정하게 일한다고 믿는 신념이다. 이러한 정치적 인지의 행태는 각 사회 또는 각 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인지적 정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으로는 노인정책, 법률을 들 수가 있는데, 노인정책은 노인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고, 법률은 국가 기관에서 노인을 위해 형식적으로 제정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 2) 감정적 정향(Affective Orientation)

이는 감정적 반응(Affective Responses)라고도 하는데, 인지된 정치적 대상에 대한 호오(好惡)로 나타난다. 정치체계와 정치적 역할, 인사 및 업무수행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데 정치체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예컨대, Almond & Verba(1963)에 따르면 미국에서 조사된 표본의 85%가 그들의 정부와 정치제도에 대하여 긍지를 갖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는 7%만이,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3%만이 그러한 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것이다.

감정적 정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인으로는 대우, 정책입안과정, 권익신장 역할을 들 수가 있다. 대우는 어떤 사회적 관계나 태도로 대하는 것으로 노인을 공경, 대접하는 태도라 할 수 있고, 정책입안과정은 노인관련 법률이나 정책에 관한 안을 세우는 과정이다. 권익신장역할은 노인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뜻한다.

### 3) 평가적 정향(Evaluative Orientation)

일명 가치의 선호(Value Preference)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공공의 목표와 정부의 행동으로부터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믿음이다. 국가가 무엇이며, 정부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하고 물을 때, 그것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에 대한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 어떤 사람은 예컨대 법과 질서의 안정 혹은 국내의 평온 등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회정의 혹은 삶의 질에 관한 대립되는 견해 사이의 대화를 중요시한다.

평가적 정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인으로는 정책평가, 민주적정책입안, 정책적문제해결, 권익신장역할수행을 들 수 있는데, 정책평가는 노인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평가하는 것, 민주적정책입안은 노인관련 법률이나 정책에 관한 안을 세울 때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정책적문제해결은 정치 과정의 산물로서 노인을 위한 공공목표의 달성, 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활동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얹힌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익신장역할수행은 노인의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 요소는 사람이나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서로 복합화, 배분화가 되어 있으며 상호 관계적이다.

## 제 2 절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정치참여의 개념

정치참여는 시민이 정부인사의 선출과 이들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행동(Verba & Nie, 1972; 박종민, 1994), 어떠한 유형의 정치체제든지 시민이 지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도자를 교체하기 위해 취하는 노력(Nelson, 1987; 박종민, 1994),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정치영역에 투입시키려는 노력(윤형섭 · 김영래, 1989)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각각의 상황과 조건에서 정치참여 주체들은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참여의 형태는 참여수준과 참여자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관습적 참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Verba & Nie, 1972; 박종민, 1994). 첫째, 간접적인 선거유세 참여형태이다. 이러한 것에는 다른 사람을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봉사하는 행위, 정치집회나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행위, 정치클럽에 회원이 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둘째, 각종 선거에서 투표하는 참여형태이다. 투표는 가장 직접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참여형태이다. 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일하거나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참여하는 행위, 지방이나 중앙정부의 관리와 접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넷째,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참여형태이다. 개인적 문제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관리를 접촉하는 행위이다.

이외에도 합법적이기는 하나 과격한 폭력적 시위, 항의데모, 억압적 행태 등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제시되기도 한다(Barnes & Kaase, 1991; 김영래, 1999). 이러한 참여형태는 일종의 항의 참여형태(예: 가두시위 가담, 항의집회참가, 법 준수 거부행동, 소요행동)와 의사전달 참여형태(예: 정치정보 제공행동, 정치논의 참여행동, 언론매체에 편지를 보내는 행동, 정치지도자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는 행동)로 논의되기도 한다(Milbrath & Goel, 1977).

이렇게 정치참여는 관습적 참여형태와 비관습적 참여형태로 구별되는데 이 중에서 집단이 사용하는 정치참여 방법은 정부, 의회, 내각에 대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행동, 부패 및 정보 제공 등과 같은 권력수준으로서의 직접행동(예: 정치자금과 정보의 제공, 국회청문회 참석)과 선전과 폭력적 방법 등을 사용하는 대중수준으로서의 간접행동(예: 대중호소 및 로비)등이 있다(Duverger, 1972; 김영래, 1999). 이런 유형의 정치참여 양식은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각종 집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정치참여 유형이다.

신명순(1993)은 전통적, 인습적 정치참여 유형을 상례적이라고 일컬으며, 상례적 정치참여의 방법으로 정치에 미친 영향력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소극적인 참여방법으로부터 가장 적극적인 참여방법의 순서로 보면, ① 정치에 관한 정보획득 ② 투표 참가 ③ 정치에 관한 토론 주도 ④ 특정인에게 투표하도록 타인에게 권유 ⑤ 이익집단에 가입 ⑥ 특

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표지 부착 ⑦ 정치인 또는 정부관리를 접촉·면담 ⑧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 현금 ⑨ 정치집회 참석 ⑩ 선거운동에 시간제공 ⑪ 선거운동에 능동적이고 활발한 역할 담당 ⑫ 정당의 간부회의 참석 ⑬ 정치자금의 모금 주도 ⑭ 공직선거에 입후보 ⑮ 정치적 직책의 획득 등이다.

또한 Milbrath(1965)는 가장 밑에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흔한 빈도로 행해지는 행동으로부터 절정에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덜 행해지는 것을 피라미드형으로 14개의 활동을 배열했다. 이것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① 누군가에게 정치적 자극 노출하기 ② 투표참가 ③ 정치적 토론 시작하기 ④ 어떠한 방법이든지 투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시도하기 ⑤ 베틀을 착용하거나 차에 스티커 붙이기 ⑥ 정부 관료나 정치 지도자와 접촉하기 ⑦ 후보자나 정당에게 재정상의 기부하기 ⑧ 정치적 회의나 집회참석하기 ⑨ 정치캠페인에 시간 기부하기 ⑩ 정당에 활발한 회원되기 ⑪ 간부회의 전략회의 참석하기 ⑫ 정치 자금 모금주도 ⑬ 당의 후보자 되기 ⑭ 정당 개최하기이다.

이와 같이 정치참여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를 시민이나 집단(혹은 조직)이 정부의 정치지도자와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활동이라고 보도록 하겠다.

## 2. 정치참여의 구성요소

정치참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정치참여의 주체로써 개인을 연구한 것과 단체를 연구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우선 개인을 연구한 것에는 한국인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전국규모의 1,551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한 한국정치문화(한배호·어수영, 1987)가 처음이다. 1995년에는 같은 설문내용으로 이전 연구와의 비교를 실시한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변화와 지속성(어수영·곽진영, 2000) 연구가 있다. 앞의 두 연구는 정치 참여 개념에 따라 14개의 참여 활동을 선정, 응답자로 하여금 실제로 활동에 참여했는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14개의 정치활동은 참여 형태, 수단, 나이도, 비용 등에서 서로間に 유사한 몇 개

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가지 참여 유형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14개의 참여 활동이 4종류의 참여 양식으로 유형화되었는데, 4개의 칼럼은 14개의 참여 변수에서 추출된 4개의 요인 혹은 차원을 의미하고 있다. 1984년 조사를 예로 든다면 제1요인에는 14개의 참여 변수 중, 4개의 변수가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고 나머지 10개의 변수는 그 부하량이 거의 0에 가깝다. 이러한 4개의 참여 활동은 나머지 참여 활동과 선명하게 구별되고 있다. 앞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4변수의 응집은 하나의 독립된 정치 참여 양식을 이루고 있다. 이 4변수의 응집을 정보추구형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3종류의 참여 유형, 즉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을 추출할 수 있었다(어수영·곽진영, 2000).

여기서는 정치참여 양식에 대해서 정보추구형,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의 4가지 양식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구체적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다.



[표 2-1] 2000년 정치참여실태

참여양상	참여의 구체적 내용	참여율
정보 추구형	신문에서 정치기사를 읽는다.	72%
	TV에서 정치뉴스를 본다.	89%
	잡지에서 정치기사를 읽는다.	37%
	정담을 나눈다.	52%
투표형	1980년 국회의원 선거(14대)에서 투표했다.	91%
	1978년 대통령 선거(14대 대선)에서 투표했다.	85%
선거 유세형	타인에게 특정인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19%
	선거유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46%
	선거포스터나 팜플렛을 읽은 적이 있다.	82%
	개인후보나 정당의 선거유세에 협조한 적이 있다.	10%
항의형	지역이나 나라전체에 문제가 있을 때 관계당국이나 언론기관에 전화, 편지, 혹은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16%
	정부관료나 국회의원에게 전화, 편지, 혹은 찾아간 적이 있다.	5%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냈다.	7%
	관계당국에 여러 사람과 함께 항의했다.	10%

또한 개인을 주체로 권위주의 상황에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수준과 형태를 조사한 한국인의 비선거적 정치참여(박종민, 1994)에서는 투표행위 혹은 선거 유세활동 등 선거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치적 행동은 포함하지 않고 비 선거적 정치적 행동의 범주만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적으로 정부관리를 찾아간 적(4.3%), 개인적으로 정치인을 찾아간 적(3.1%), 정부관서에 진정서를 낸 적(7.8%), 정당에 호소한 적(2.2%), 종교 혹은 사회단체에 호소한 적(7.0%), 언론기관에 전화하거나 투고한 적(9.7%), 항의대회에 참석하거나 시위에 가담한 적(17.7%)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정치참여 주체로써 단체를 다룬 연구로는 한국 이익집단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윤형섭 · 김영래, 1989)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의 이익표출 및 추구활동을 위한 정치참여유형을 파악하고 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교육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의 실제정치참여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권력수준의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자금

과 정보의 제공, 국회청문회 참석 등이 있으며 대중수준으로서의 간접행동은 대중호소 및 로비, 결의문, 성명서, 공청회개최, 홍보활동 등을 포함하였다. 대표적인 단체인 전경련은 88년 권력수준으로의 직접 행동은 70.6%, 대중수준으로의 간접행동은 29.4%를 나타냈으며 한노총의 경우 권력수준으로의 직접 행동은 54.9%, 대중수준으로의 간접행동은 45.1%를 나타낸다. 연구 결과로써 전경련이 행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합법적인 정치참여의 핵심을 정치자금 공여행위로 제시하였다(김교연, 2004).

또한 한국의 사회단체를 8개의 범주로 나누어 이 단체들의 정치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선거활동양식과 정당에 대한 이들의 접촉, 선거를 둘러싼 단체의 정당 및 행정과의 접촉의 양상이나 정치적 표적을 내용으로 하여 연구한 한국사회단체의 정치활동(홍성만, 2002)이 있다. 여기서는 선거활동을 특정의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호소하는 참여방법과 회원들을 통해 일반인에게 호소하는 참여방법, 자금을 지원하는 참여방법, 선거운동에 인력을 지원하는 참여방법, 단체의 회원을 특정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참여방법으로 나누었다. 또한 각 단체들의 정당지지, 이념성향, 정당 신뢰 등을 조사하였다.

이상으로 한국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정치참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조절변수인 정치참여의 내용구성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제 3 절 노인권익운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노인권익운동의 개념

노인권익운동은 기존의 규범, 가치, 제도 등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과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계급성에 기반을 둔 대표적 사회운동인 노동운동과는 구별이 되며, 근대화로 야기된 사회문제들의 하나인 노인문제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권익운동이란 ‘노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찾으려는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집단행동’이다. 노인들의 복지와 권익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명기되어 있듯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인 것이다(정기명, 2004).

또한 노인권익운동은 노인들의 복지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즉, 노인권익운동이란 노인의 안정된 삶과 복리증진에 방해가 되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집합적 노력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복지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노인권익운동, 노인복지운동, 노인권익옹호운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이 갖는 복지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의식주 보장의 권리, ② 수발청구권, ③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보장의 권리, ④ 노동과 적당한 소득보장의 권리, ⑤ 재산상의 권리보호를 받을 권리, ⑥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⑦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노인권익운동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적인 한국의 정치구조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급진적 사회변혁이 아니라 안정적 사회구조 속에서 정치 발전이나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노인들의 문제가 권리운동을 주관하는 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사회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나 의회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무리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가 활발한 역할을 한다 해도 복잡하고 수많은 정보를 독점할 수 없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노인권익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구성원의 이익 추구 활동을 통한 각종

행사를 통해 국민에 대해 정치적 교육을 할 수 있다. 노인 권익단체의 정책과 각종 홍보물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경로효친의 사상과 노인의 권리와 권위를 확인시켜주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운동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역사적으로 이와 유사한 노동운동, 민족독립운동을 주도한 인사가 정치인으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

## 2. 한국의 고령화와 전통적 정치행태

### 1) 한국의 고령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인 인구의 절대수와 상대적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국제 연합의 인구 추계 자료(1998)에 따르면 2000년은 기점으로 세계의 인구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의 5.3%에서 2000년에는 6.9%, 그리고 2020년에는 9.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데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수명의 연장을 들 수 있다. [표 2-2]에서처럼 1970년부터 지난 35년 동안 16.7세 증가하였으며, 2005년 현재 남자 75.14세, 여자 81.89세로 평균 78.63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평균 수명이 80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2-2] 기대수명의 증가 추이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전체	61.93	65.69	71.28	76.02	78.63	79.60	81.45	83.13	84.65	86.02
남	58.67	61.78	67.29	72.25	75.14	76.15	78.04	79.79	81.39	82.87
여	65.57	70.04	75.51	79.60	81.89	82.88	84.68	86.27	87.67	88.92

자료 : 통계청, 기대수명(전국), 2011.12

둘째, 노인 인구의 증가이다. 즉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인 인구의 절대수와 상대적 비율에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970년에 100만 명에도 못 미치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에는 339만 명, 2005년에는 416만 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5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노인인구 및 노령화 지수의 증가 추이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총인구 (천명)	32,241	38,124	42,869	47,008	48,138	48,875	49,326	48,635
65세 이상 인구(천명)	991	1,456	2,195	3,395	4,166	5,357	7,701	11,811
65세 이상 비율(%)	3.1	3.8	5.1	7.2	9.1	11.0	15.6	24.3
노령화 지수	7.2	11.2	20.0	34.3	44.1	67.7	125.9	213.8

자료 : 통계청, 가정별 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 평균연령(전국), 2011.12

국제 연합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일 때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이상 차지할 때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05년의 9.1%를 거쳐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불과 7년 후인 2025년이 되면 20.0%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권중돈, 2004). 여기서 한국 사회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의 속도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행되는 데 7년 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 어디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른 진행추세이다.

셋째, 노인인구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부양 및 보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된 지표로서 노령화 지수(Aged Population Index)와 노인부양비(Aged Dependency Ratio)를 들 수 있다. 먼저, 노령화 지수는 연수인

구(0세에서 14세)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은 높을수록 한 사회의 활력이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 문제와 저(低)출산 문제의 동시 언급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노인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세에서 64세)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의 노인부양부담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3]의 일부는 노령화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상승이다. 즉 1970년의 7.2에서 2005년에는 44.1로 35여 년 동안 6배 가까이 증대되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노인인구의 증대와 출산율 감소가 서로 맞물리면서 35년 사이 사회의 활력이 6배 정도 저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표 2-4]은 노인 부양비를 포함한 관련 부양비에 관한 것이다.

[표 2-4] 부양지수의 변화추이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유년부양비	77.2	78.2	54.6	36.9	29.4	26.7	23.9	19.6	19.1
노인부양비	5.3	5.7	6.1	7.4	10.1	12.6	14.8	21.3	35.7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	19.6	17.7	16.3	13.5	9.9	7.9	6.7	4.6	2.7

자료 : 통계청, 가정별 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 평균연령(전국), 2011.12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년 부양비는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노인 부양비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즉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생산 연령 인구의 유년 부양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노인 부양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196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약2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겠지만, 2000년에는 1명의 노인의 부양하는데 동원되는 생산 연령 인구가 1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실질적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서 이는 노인부양의 부담을 둘러싼 생산연령 인구와 노인인구 사이의 세대 간 갈들을 낳을 수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 2) 고령 유권자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 유권자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고령 유권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령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거는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수의 게임’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지지의 강도나 내용보다는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가 보다 많은 표를 획득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선거정치에서 지역주의 투표의 영향으로 세대 간 갈들이나 대립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세대갈등이나 특정 세대가 정치세력화하고 있는 양상이 부각되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이나 특정 세대를 정치세력화 하는 선거를 세대 간 가치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나 이념적 대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세대 간 정치참여 행태와 이념적 성향 분석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고령 유권자의 증가와 정치참여행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5] 한국의 인구증가와 유권자 비율의 증가

년도	인구수	선거인수	비율(%)
1963	26,278,025	13,344,149	50.8
1971	30,839,687	15,610,257	50.6
1978	36,228,754	19,489,490	53.8
1981	36,778,977	21,094,468	55.9
1988	41,578,821	26,198,205	63.0
1992	43,862,069	29,003,828	66.1
1996	45,928,048	31,488,294	68.6
2000	47,424,300	33,482,387	70.6
2004	48,426,757	35,596,497	73.5
2008	49,315,006	37,796,035	76.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http://www.nec.go.kr))

[표 2-5]는 한국의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전체인구증가와 유권자 비율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인구를 보면, 1971년 선거에서 전체인구는 3천만 명을 넘어섰다. 1985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체인구는 4천만 명을 넘어서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천1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체인구의 증가현상은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9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천 5백만 명, 지난 2004년 선거에서는 4천 8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유권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3년 50.8%에서 1988년에는 63.0%로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70.6%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전체인구의 76.6%가 유권자로 나타났다. 1963년과 2008년의 전체인구의 유권자 수를 비교하면, 전체인구는 1.88배 증가하였으나 유권자 수는 2.83배 증가하였다. 이렇게 유권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역시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5]와 [표 2-6]는 1996년 국회의원선거 이후 각 연령별 유권자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인구의 증가에 따라 20대를 제외한 30대 이상 연령의 유권자수가 증가하였다. 20대 유권자의 감소는 저(低)출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대와 30대 유권자의 비율은 각각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20대 유권자의 감소폭이 더 크다. 4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40대의 증가 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60대 이상 세대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유권자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세대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연령별 유권자 비율의 증가

년도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96 국선	계	31,488,294	8,923,536	8,665,856	5,647,759	4,045,896	4,205,247
	남	15,490,279	4,551,113	4,444,156	2,877,617	1,967,444	1,649,949
	여	15,979,015	4,372,423	4,221,700	2,770,142	2,078,452	2,555,298
2000 국선	계	33,482,387	8,382,411	8,839,737	6,843,981	4,375,576	5,040,682
	남	16,436,931	4,268,708	4,503,937	3,471,192	2,154,891	2,038,203
	여	17,045,456	4,113,703	4,335,800	3,372,789	2,220,685	3,002,479
2004 국선	계	35,596,497	7,872,961	8,877,786	8,129,086	4,710,356	6,006,308
2008 국선	계	37,796,035	19세 623,059	8,577,587	8,529,320	5,896,242	6,910,136
			20~29세 7,259,69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http://www.nec.go.kr))

### 3) 한국노인의 전통적 정치행태

한국노인의 정치적 특성에 관한 설명들은 흔히 정치문화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주의, 권위주의, 집합주의, 정의주의, 숙명주의가 우리나라 전통문화로 지적되고 있고 전통적 정치문화의 영향은 노인들이 보다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김운태 외, 1994).

이러한 정치문화의 영향으로 역대 각종 선거에서 나타난 노인들의 정치행태를 보수지향성, 지역지향성, 온정지향성, 탈정치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장도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수지향성 : 투표에서의 보수지향성이란 정권의 변화를 원치 않고 새 인물의 등장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여 현 정권 현재인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의미 한다. 이러한 투표경향은 노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나 과제를 제시하는 진보적 견해의 수용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현실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2) 지역지향성 : 우리 노인의 집합주의 가족주의적 정치문화에서 비롯되는 투표경향으로 인물과 정책에 입각하여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정치적 기반이 어디냐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다. 지역주의적 투표경향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치 전체의 문제점이기도 하나 노인층에서 그 경향성이 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노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실현시킬 수 없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 온정지향성 : 우리 노인들이 투표에 임하면서 합리적 비판보다는 온정적 포용을, 정책적 대안보다는 원론적 당위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경향은 결과와 성과로 평가하기보다는 의도가 어땠느냐를 중시하는 명분론적 입장에 치우치게 하고 그 결과 노인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스스로 정치체계에 요구할 수 있는 의욕과 동기를 상실하게 한다.

(4) 탈정치성 : 정치적 무관심이나 냉소주의와는 달리 자신들이 지난 정치적 관심을 집단화하여 정치권에 표출하려는 행동의 결여를 의미한다. 한국노인들의 탈정치성은 ‘어른’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나 스스로 대접받기를 요구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행동이라는 이율배반적 가치관에서 비롯한다.

이처럼 한국노인의 전통적 정치행태에 관한 평가는 정치문화의 관점에서 가부장적 혹은 신민형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그것이 노인들의 권리운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재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과거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의 주역이었던 장년층들이 급속히 노년인구로 편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정치행태도 변화되고 있다. 그러한 정치행태의 변화가 노인권익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3.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현재의 한국 노인들은 출생기로부터 오늘날의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고통을 체험한 세대이다. 이 분들의 중요한 가치관은 그 동안 전쟁과 이념대결에서의 가족보호, 내핍생활,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탄압에서의 생존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그 분들의 정치문화영역도 자신의 의사를 과감히 표출시키는 것보다는 유보시키는 행동, 말하자면 유교의 전통윤리와 신민문화적(臣民文化的)인 정치성향을 견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온 정열을 다 쏟았는데 그것은 현재의 노인세대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전쟁 등을 체험하면서 많이 배운 젊은이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대우 등 그 한(恨)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보상심리로 작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현재의 노인들은 정치와 경제의 최악의 사태에 대하여도 지혜를 발휘하며 스스로를 지켜온 놀라운 생명력과 인내력을 가진 세대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빈곤, 질병, 역할의 상실, 고독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4苦가 있다.

첫째, 노인은 빈곤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나 사유재산의 소유에 입각한 희소가치에의 도전에서 실패한 것이다. 외국에서처럼 노인연금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부조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도 않다.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박명화 외, 2008, p.534)에서 전체 노인의 37.5%(65세 이상 기준 33.8%)가 노후생활을 준비하였다고 응답하여 전체 노인의 약 1/3정도만이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의 한 달 용돈 5만원 미만이 17.1%, 5~10만원 미만이 25.6%, 10~20만원 미만이 29.8%, 20만 원 이상이 27.5%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쓰는 노인이 42.7%에 해당 할 정도로 노인은 가난하다. (월평균 용돈 15.6만원(65세 이상 기준 13.9만원)) 수입되는 일의 종사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도 농촌노인의 경우에는 59.5%가 일을 하는데 비해 도시거주노인은 23.1%만이 수입이 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둘째, 노인은 건강의 약화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연세가 들면 신체적 제 기능이 원만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의 위협 속에 발병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이 각종 질병에 신음한다 해도 빈곤에 시달리기 때문에 제때에 양질의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서구처럼 노인을 위한 공적 의료기관이나 서비스센터, 노인병만을 진료해주는 클리닉도 드물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노인은 그래도 가족원의 배려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노부부만의 세대는 질병에 걸렸을 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78.8%가 (의사진단)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연령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었다. 예들 들면, 65-69세 노인의 경우 78.9%, 70-74세 노인의 경우 82.9%, 75-79세 84.9%, 80-84세 84.1%, 85세 80.7%이상 노인의 경우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박명화 외, 2008)

60세 이상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의사진단 유병률) 가장 많은 것은 고혈압이었다.(44.4%) 그 외에 골관절염/ 마티스관절(27.4%), 요통/골신경통(17.0%), 당뇨병(15.6%), 골다공증, 위십이지장 궤양/위염, 협심증/심근경색증, 뇌졸중, 백내장, 만성기관지염/폐기종, 고지혈증 등의 순서였다.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노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을 만성질환노인의 43.3%가 이를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22.4%를 들 수 있다. 또 의료기관에 갈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렵다는 노인이 4.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외로움·소외감·자존심 상실 등 15.8%, 간호와 수발에 따른 어려움 0.9% 순이었다(정경희 외, 2004).

노인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으로 전체의 30.1%가 일상생활에 어려움 있었고, 51.39%가 약간 있다고 응답을 하여 노인 중 82.0% 정도가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는 역할의 상실이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 중의 하나는 핵가족제도이다. 이 핵가족제도 하에서 노인은 가족 내에서의 가부장적 권위를 상실하였다. 거기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다. 그야말로 가족 내에서의 물이해의 존재로 전락되었다. 또 노인의 역할의 상실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사회에서의 역할의 상실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역할의 상실, 자녀의 성장, 출가로 인한 역할이 상실, 가까운 친구, 친지들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생기는 역할의 상실을 들 수 있다.

취업노인의 취업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계비 마련 때문(87%)이었고, 그 외에 건강유지(6.0%), 용돈 필요(3.1%), 시간을 보내기 위해(3.1%), 사람들과 교제(0.5%) 등으로 나타났다(박명화 외, 2008).

넷째는 소외와 고독감이다. 노인의 소외와 고독감은 노인부양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노인의 부양은 그 동안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생활용품이나 금전과 같은 물질적 부양이 있고, 일상의 시중 및 병간호 같은 신체적 부양이 있으며, 문안, 대화 및 가사에의 참여 등과 같은 심리적 부양이 있다. 이 세 가지 중 노인의 고독과 불안감은 심리적 부양의 결핍에서 온다고 본다(황진수, 1989). 또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41.4%, 「건강문제」 40.3%, 「소일거리 없음」 5.7%, 「외로움, 소외감」 4.4%, 「노인시설부족」 2.5%,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2.2%,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1.7%, 「일상생활도움 서비스 부족」 0.9%, 「가족으로의 푸대접」 0.2%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통계청 「사회조사」 2009).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기조는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논리였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미온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무관심 속에서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경제성장원리 위주의 시장경제원리 정책과 맥을 함께 했고, 정치인을 포함한 일부 관료들은 「복지국가위기론」 주장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은 빈곤계층과 같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버림받은 계층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사회에서의 사회운동(환경운동, 시민모임의 단체운동, 노인운동, 장애인·여성운동 등) 등의 이기주의에 입각한 님비(Nimby)운동이 많이 일어났지만 노인의 권익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은 아직도 성숙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노동의 의무내용과 조건은 민주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

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기하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복지국가임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리고 노인현장을 보면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취미나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노인의 권리를 열거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은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도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노인복지법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의 노인복지가 결렬한 노동운동이나 정치력간의 합의 또는 대중의 강렬한 상승적 욕구를 바탕으로 성취된 복지국가라면 우리의 경우는 집권자가 「상황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관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입장과 행정편의가 많이 담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할 수 있는 노인권익운동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도 아직 그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사회운동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최근 시민단체가 급속한 성장을 함에 따라 비정부기구라는 NGO(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숫자가 20,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정부(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숫자만도 2,600여개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권익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단체로는 없고 원래 NGO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역할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가권력과 시장횡포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고 둘째는 사회정의와 시민 권리를 강화시키는 후원의 기능이 있으며 셋째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한국노인관련 NGO들이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NGO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외 NGO와의 연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회의, 각종 사안별 공동 캠페인, 워크샵이나 세미나 개최, 노인들의 재교육프로그램운영 등의 교육활동, 각종 조사연구 활동, 상호지원 및 정보교류, 지도자교류 등과 같은 사업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권익운동을 위한 NGO 기관으로서는 대한노인회, 노년유권자연맹,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의 전화, 한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등을 들 수 있다.

한 나라의 노인복지가 어느 수준에 놓여 있느냐에 대한 척도는 그 나라의

노인집단들의 권익옹호운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인복지정책이 개발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박재간, 1999).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부진하고 계속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노인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노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노력은 경주하지 않았다는 점과 복지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를 심화시켜온 또 다른 요인이 되어 왔다. 그 결과 대표적인 노후생계보장정책인 연금제도 실시에서 이미 노령에 도달한 계층들이 완전히 소외당했으며, 노인복지정책 또한 노인의 사회적 문제인 4苦(질병(病苦), 수입의 감소(貧苦), 역할상실(孤獨), 소외감(無爲))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소비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정책에 밀려왔다.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 노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지만 반면에, 노인이 가진 경험과 기술의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존경과 경외사상이 퇴색하고 불리한 교환자원을 가진 노인들은 사회의 주류에서 한계점으로 밀려나며 소외되고 차별되고 불공평하게 대우받게 된 것이다(이인수, 1999).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인세대는 경제적 궁핍, 전통적 가치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는 배신감 등에서 오는 무력감 때문에 노인자신의 의사표출이 서툴고 자신의 권리 찾기에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노인 단체들의 권리운동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4. 외국의 노인권익운동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 노인들의 정치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의견발표, 정당가입, 투표, 그리고 노인 단체의 사회운동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은 첫째,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수

립이나 시행 과정에 대하여 노인 자신의 의견이나 단체의 견해(polynomial opinion)를 각종 통신매체(신문, 방송, 편지, 엽서, 전화, 전신, 인터넷 등)를 통하여 피력하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식 제고와 권익신장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노인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정당에 가입(party affiliation)하여 소속당의 발전과 정권유지를 위하여 활동한다. 때로는 소속 당을 대표하여 직적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고 또는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당선된 후에는 국회나 행정부에서 정책결정자로 혹은 행정수행자로 일하면서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노인들은 투표(voting)를 통하여 특정한 입후보자를 지지하면서 노인 권익을 도모한다.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노인들의 지지표가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결집된 투표는 막중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인층의 투표율은 젊은 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18-24세의 젊은 층은 43%의 투표율을 보였으나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70%가 투표하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젊은 층은 20%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으나 노년층은 6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U.S. Bureau of the Census, 1993).

넷째, 노인 단체의 사회운동이다. 노인권익 신장을 위한 사회운동은 노인복지에 뜻을 같이하는 회원들이 결집하여 이익집단(interest group)을 형성하고 정치권으로 하여금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의식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노인권익 운동은 노인 단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여성단체, 종교단체, 기타 여러 시민단체등과 연합하여 더욱 효과적인 사회운동을 시행할 수도 있다.

### 1) 미국 노인의 권리운동

미국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다는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를 비롯하여 1,000여개의 노인 단체들이 있다. 전국 규모의 노인 단체만 해도 100여개가 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 있는 노인관련 단체가 900여개가 된다.

미국노인을 위한 권리운동은 1865년 이후부터 볼 수 있다. 남북전쟁(1860~1865년)에 참가했던 군인들에게 재향군인 연금(Veterans benefits)을 지급하기 위한 활동이 191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제1차 1919년에는 그리스도교회 연합회(Feder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와 미국노동법제정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 Legislation)에서 미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방정부공무원연금법(Federal Employees Pension Act)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27년에는 미국노년보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Old Age Security)를 결성되어 전 국민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1933년까지 미국 25개 주에서 노령연금지원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933년 Francis Townsend는 당시 경제 공황으로 어렵게 살고 있던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하여 매월 200달러(약 26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그 재정조달을 판매세(sales tax)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여 전국적으로 커다란 호응을 얻었으며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통과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1947년에는 고등학교 교장이었던 Ethel Percy Andrus 박사를 중심으로 전국은퇴교사협회(National Retired Teacher Association: NRTA)가 조직되어 은퇴교사들의 열악한 연금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을 소개한 후 이 운동이 성공하자 1958년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를 설립하게 되었고, 1982년에는 NRTA와 AARP가 통합되어 오늘의 AARP가 되었다.

### (1) AARP의 활동

AARP는 명실 공히 세계 최대의 노인단체로서 노인권익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황진수(1999)는 한 단체가 성공적인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구비요건과 내적인 구비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외적인 구비요건으로 정치기관의 개방성과 정치적 제휴 문제이고 내적조건으로 사회운동 주체의 리더쉽, 조직, 그리고 응집력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AARP가 거대한 노인권익단체

로 성장하기 까지는 미국이라는 복합적이고 개방적인 사회(pluralistic and open society)에서 이익집단(interest groups)간의 연대활동이 비교적 쉬운 점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AARP가 능력 있는 권익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볼 수 있다.

첫째, AARP는 노인회원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침이다. 회원대상으로 건강보험, 자동차 및 주택보험, 재산관리 서비스, 약배달 서비스, 법률서비스, 여행자 할인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염가로 신속하게 제공한다.

둘째, 회원가입이 용이하다. 5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에 관계없이 회원이 될 수 있고 1년에 회비 \$10(1만 3천 원)만 지불하면 AARP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정부, 기업, 다른 단체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능력이다. AARP는 정부기관이나 다른 단체나 기업에게 노인복지를 위하여 무조건 도와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전략적인 협상과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유지하며 그들의 자원을 활용한다.

넷째, 단체의 목적추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AARP는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 나이 들어가면서도 회원들의 자립생활, 존엄성 유지, 목적 달성, 그리고 긍정적인 노인 상(image)의 확립을 통한 복지사회 건설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AARP, 1999). 1998년 현재 AARP의 회원 수는 3,400백만 명에 이르고 적어도 16만 명의 회원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섯째, AARP는 항상 초당파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정당이나 정권을 위한 지지나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노인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하므로 AARP의 견해와 활동에 대한 존중과 공신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이다. AARP 조직 내에 전국법률위원회(National Legislative Council)를 설치하여 매년 노인문제에 대한 AARP의 정책입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법, 규정 등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특정 법규의 통과 및 기존 법규의 개정이나 폐지를 권유하며 법 시행에 대한 감시, 그리고 정책문서와 관련된 사건을 소송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AARP는 공공정책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설문조사 계획 및 조사부(Survey Design and Analysis), 인구통계 및 동향분석부(Demographics and Trend Analysis), 그리고 연구정보센터(Research information center)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일곱째, 미국의 잡지가운데 최대의 부수를 자랑하는 Modern Maturity와 월간지 AARP Bulletin 등을 통한 AARP 활동에 관한 홍보, 각종 교육 프로그램,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그리고 두 간행물에 광고를 실리는 기업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와 행정보조비등의 추가 수입이다.

여덟째, AARP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다. AARP는 현재 일 년 5억 5천만 달러 예산을 확보하여 1700여명의 전문 직원들과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하여 일하는 AARP에 소속한 입법 및 행정 전문 로비스트(lobbyist)만도 150여명(자원봉사자 포함)에 이르고 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또한 AARP가 공신력을 가지고 발전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AARP는 매년 재정운영에 관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Belletin에 게재하고 회원과 국민들로부터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겸증 받는다.

AARP의 활동 모두가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가진 세계 최대의 노인단체가 AARP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미국내 저소득층 노인이나 소수민족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중산층 노인들로 구성된 회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부자노인들의 단체’ 또는 ‘욕심쟁이 노인(greedy geezers)들의 단체’라는 별명도 나오고 있다. 또한 오늘날 지구촌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발전도상국에 있는 수많은 노인들이 가난과 질고속에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AARP는 이러한 외국 노인들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비평도 나오고 있다.

## (2) 기타 미국의 노인권익 단체

AARP 보다 회원 수나 예산이 적지만 연령에 의한 노인차별을 반대하고 노인의 권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회색 표범(Gray Panthers)’이라는 노인단체가 있다. 회색표범은 1970년 미국의 65세 여성노인 Maggie Kuhn의 지도하에 결성되었다. Kuhn여사는 본인이 65세가 되어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직당한 후 ‘노인은 나이가 들었다고 낡고 못 쓰는 중고차가 아니다. 노인은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진 노련하고 생산성 있는 인간이다. 마치 낡은 차를 폐차장에 버리는 것처럼 노인을 직장과 사회로부터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결속하여 정치세력을 강화하고 노인 차별이나 강제퇴직을 막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노인표범 단체는 전국에 120개소의 지부를 두고 약 6만 명의 회원이 노인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AARP 다음으로 회원 수가 많은 노인단체로 1991년에 설립된 전국고령시민 협회(National Council of Senior Citizens(NCSC))가 있다. NCSC는 미국 노인들의 의료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지금은 500여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노인 의료문제 뿐만 아니라 빈곤문제, 고용확대, 노인주택 및 교통문제 등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노인들의 건강보호, 소득보장, 요양보호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1981년 여성노인연맹(Older Women's League)을 비롯하여 소수민족 노인들을 위한 권리단체(NCOBA, NHCOA, NCOAPA, NICOA), 노인전문학술 및 연구 단체(GSA, ASA, AGHE, NCOA), 서비스 단체(AAHA, ANHA) 등 많은 노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 2) 유럽국가의 노인의 권리운동

산업화와 아울러 인구의 고령화가 일찍 시작한 유럽 국가들은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과 제정촉구를 위한 노인 단체의 활동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또한 미국의 노인권의 운동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유럽연합 국가들의 노인 단체들도 유럽연합(United Europe), 소속 회원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로 실시되고 있

다.

### (1) 유럽연합의 노인권익운동

최근 구성된 유럽연합위원회 및 국회(European Commission and Parliament)에서는 유럽전체 노인의 의견과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노인대표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 전체노인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로는 유럽노인복지연합회(European Federation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EURAG), 유럽노인연계망(Eurolink Age), 유럽퇴직노인연합회(European Federation of Retired and Older People: FERPA), 국제노인단체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Older Peple's Associations: FIAPA) 등이 있다. 유럽연합위원회, 유럽연합국회 그리고 유럽연합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등에서는 유럽연합 노인 단체들에게 각 회원국에 필요한 노령연금, 고용기회 제고 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요즘 유럽 국가들의 노인권익 활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가 아래로부터 위로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치적 압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유럽연합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노인 단체 지원과 노인인구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지지이다. 일반 국민의 여론들도 노인권익 운동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유럽연합에 소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의 경우 84%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Walker, 1993).

### (2) 유럽연합 국가들의 노인권익운동

유럽 국가들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영세민 등 소외계층을 보살펴 왔다. 그러나 1973년의 기름 파동과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국가재정이 어렵게 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은 사회 인구학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인구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가운데 직장인들은 조기에 퇴직하는 결과로 연금지출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재정을 압박하게 되었다. 따라

서 계속 증가하는 복지예산을 삭감하려는 이를 반대하는 퇴직노인들과의 사이에 갈등을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복지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노인 단체들의 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의 노인권의 운동은 1898년 사회개량가 Charles Booth의 지도하에 설립된 ‘노령연금 제정을 위한 국립노동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Organized Labor on Old Age Pensions)’의 활동과 1899년 무역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그리고 1904년 국립선의사회회의(National Conference of Friendly Societies) 등으로 올라간다. 1908년에는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Act)을 제정하고 그 대상은 70세 이상의 노인, 연 수입 21~31파운드 이하의 소득, 그리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노인에 국한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영국은 국립퇴직자회의(National Pensioners Convention)을 설립하고 이를 1992년에 다시 지역 노인 단체들과 노동조합원 등을 통합하여 200만 명 회원을 자랑하는 노인권의 단체로 확대되었다. 영국은 또한 1991년에 연금수급자보호정당((Pensioners Protection Party)을 설립하기도 하였다(Walker, 1999).

독일도 1917년부터 전쟁피해자, 장애인, 연금수급자들이 연합하여 권익단체로 활동하여 오다가 1950년경에는 1백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였다. 독일은 또한 지방자치단위로 노인보호위원회(Senior Protection Association), 일명 회색표범(Grey Panthers) 단체가 1975년에 결성되어 1995년에는 전국 200여 개소에 1만 5천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노인권의 운동을 시행하였다.

최근 유럽국가들 중에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발하여 노인 단체의 급진적인 권리옹호 운동이 일어났다. 덴מרק 노인들은 ‘C 팀’이라는 노인행동단체를 결성하여 정부의 노인보건복지 예산 삭감 방지를 위한 결기대회를 개최하였다(Platz & Petersen, 1995). 1992년 이탈리아 연금 자정당(Italian Pensioner Party)에서는 첫 후보자를 로마시의원으로 당선시켰으며 1993년 네덜란드에서는 7명의 연금자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다. 이와 같은 노인 단체들의 급진적인 사회운동은 유럽 국가들이 후기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새로이 나타나는 시민의식과 소비자 정신에 의한 권리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Walker, 1999).

### 3) 일본노인의 노인 권리운동

#### (1) 일본의 노인권의 증진 운동

일본에서의 노인권의 운동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 시작 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군수 통치하에서 공공질서에 방해되는 옥외 집회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는 3인 이상이 모여 단체행동을 하면 체포될 위험성이 높았다.

일본은 1961년 국민연금법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연금 지급액은 겨우 손자녀 사탕 값에 지나지 않아 수급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1964년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규모 운동이 일어났다. 일본 공산당에서 지원하는 전일본자유노동자연합(All Japan Free Workers Union)에서는 노동조합, 민주의사협회, 노인클럽 등과 연계하여 노후 소득보장, 노인고용, 노인주택, 그리고 무료 의료서비스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월기대회를 가졌다. 결과적으로 동경도에서는 196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의료비 보조를 시작하였고, 1973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하였다.

1972년에는 전일본자유노동조합, 동경도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노인클럽 등이 연합하여 동경노년보장증진위원회(Tokyo Council for Promoting Old Age Security)를 결성하고 정부 후생성 건물 앞에서 노령연금 인상과 의료서비스 개선, 고용기회 확대, 노인주택과 요양원 건설 등을 요구하는 월기대회 및 연좌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결과 일본 정부는 1973년부터 노인의료비 보조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70년대에 이룩한 커다란 경제성장에 힘입어 노령연금을 높이고 노인고용을 확대시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에 일본 노인들의 관심사도 생계문제에서 노후 건강유지와 여가활동으로 점점 전환하게 되었다(Sodei, 1995).

일본 노인권익운동의 흐름은 노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부터 들춰내서 정책입안에 깊숙이 개입하는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2) 노인 단체의 권리운동

일본에는 두 가지 노인권의 단체가 있다. 하나는 조직이나 운영방침이 위로

부터 내려오는 ‘노인클럽(senior citizen clubs)’과 같은 단체요, 다른 하나는 아래 민초(grassroots)들로 구성된 고령화사회 개선을 위한 여성그룹(Women’s Group for Improvement of an Aging Society: WGIAS)을 들 수 있다.

### ① 일본의 노인클럽 활동

일본의 노인클럽은 1950년 초부터 시작하여 성장을 거듭해 왔다. 1954년에는 전국에 노인클럽이 112개소로 확장되었고, 1962년에는 일본노인클럽협의회(Japan Federation of Senior Citizen’s Clubs: FSCC)을 결성하여 일본 사회복지협회와 함께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1963년에 일본 노인복지법은 통과 되었고 후생성은 5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노인클럽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노인클럽은 연간 57,600엔(약 60만 원)의 운영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노인지도자 교육, 세대교환 프로그램, 회원 모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돋기 등의 활동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로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보조비는 긍정적인 면에서 노인클럽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부정적인 면으로는 정부지원에 너무 의존하게 되므로 독립성을 가지고 노인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995년 현재 일본에는 131,653개소의 노인클럽에 850만 명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방대한 노인클럽의 운영진에는 전직 후생성 관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선거 때가 되면 현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투표를 유도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75년 일본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의료서비스를 종결시키려고 할 때 노인클럽은 이를 반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사실이다.

현재 노인클럽회원의 2/3이상이 여성노인이지만 클럽 운영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클럽지도자들의 평균연령이 80세가 넘어 기동력이 약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따라서 현준의 젊은 회원들이 클럽을 떠나고 있고 새로운 회원 모집 또한 어렵다. 후생성은 지금 새로운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젊은 회원들을 가입시키기

위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 국제 활동 등을 개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② 고령화 사회 개선을 위한 여성그룹(WGIAS)

1982년 일본 동경에서는 ‘노인문제에 관한 여성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개최하여 가정의 노인 간호, 지역사회 노인보호,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등에 관한 토의를 가졌다. 참석인원은 600명이 넘었다. 1983년 여류작가 게이고 히구치를 중심으로 전문직을 가진 40대 및 50대의 중년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고령화사회 개선을 위한 여성그룹(WGIAS)’을 설립하고 노인권익옹호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3년부터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여성노인의 재정문제, 노인주택문제, 의료서비스 등 중요한 노인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부양 가족에 대한 욕구조사,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일본 여성 정치가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연구하고 노인복지에 관련된 저서 출판, 그리고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방문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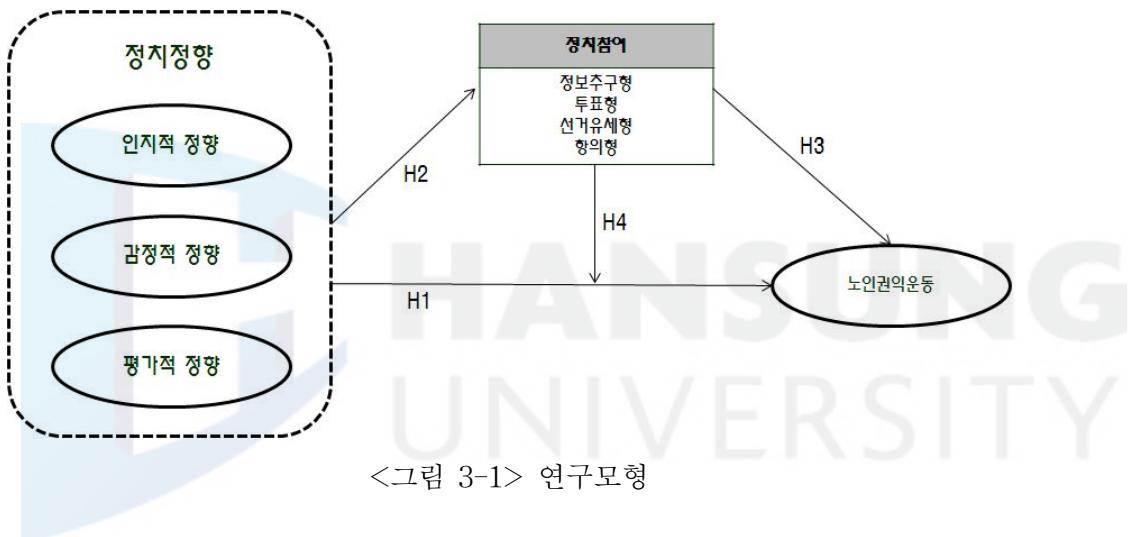
1985년에는 WGIAS에서 재가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소(Adult Day Care Center)를 초등학교 단위로 전 일본지역에 확대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1989년 정부는 노인주간보호소를 중학교 단위로 17,000개소를 개설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골든 플랜(Golden Plan: 노인복지 10개년 계획)에 반영하였다. WGAIS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며 오직 노인복지 증진 특히 여성노인 권익을 신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3년부터는 일부 회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유세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여성해방운동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여성노인의 고충이나 여성들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에 좋은 결과를 가져 보겠다는 WGAIS의 노인권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 제 3 장 연구설계

### 제 1 절 연구모형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Parsons & Shils(1951)의 준거를 바탕으로 Almond & Verba(1963)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치정향의 구성요소 3가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 1. 연구문제

- 1) 노인권익운동은 정치정향의 구성요소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 2) 정치참여는 정치정향의 구성요소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 3) 노인권익운동은 정치참여의 구성요소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 4)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영향을 미칠 때 정치참여는 참여유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가설

### 1) 정치정향과 노인권익운동 간의 관계

*H1 : 정치정향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인지적 정향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H1-2 : 감정적 정향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H1-3 : 평가적 정향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 2)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

*H2 : 정치정향은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 인지적 정향은 정치참여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H2-2 : 감정적 정향은 정치참여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H2-3 : 평가적 정향은 정치참여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 3) 정치참여와 노인권익운동 간의 관계

*H3 : 정치참여는 유형에 따라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 정보추구형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H3-2 : 투표형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H3-3 : 선거유세형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H3-4 : 항의형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 4) 정치참여와 정치정향, 노인권익운동 간의 관계

*H4 : 정치참여는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 정치참여는 인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H4-2 : 정치참여는 감정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H4-3 : 정치참여는 평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 제 3 절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정치정향

Almond & Verba(1963)는 Parsons & Shils(1951)의 준거를 바탕으로 제시한 정치정향의 구성요인은 정치정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본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1) 인지적 정향

인지적 정향은 경험적 신념에 의한 정치적 성향과 태도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노인정책’, ‘법률’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2) 감정적 정향

감정적 반응(Affective Responses)라고도 하는데, 인지된 정치적 대상에 대한 호오(好惡)로 나타나는 차원으로 ‘대우’, ‘정책입안 과정’, ‘권익신장을 위한 역할’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3) 평가적 정향

가치의 선호(Value Preference)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공공의 목표와 정부의 행동으로부터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믿음에 대한 차원으로 ‘정책 평가’, ‘민주적인 정책입안’, ‘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 ‘권익신장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2. 정치참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를 ‘시민이 정부인사의 선출과 이들의 정책적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나 노력’으로 정의하였다(Verba & Nie, 1972; 박종민, 1994).

한배호 · 어수영(1987), 어수영 · 곽진영(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정치참여의 구성요인은 정치참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본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노인권익운동

본 연구에서는 노인권익운동을 ‘노인들의 복지와 권리 찾으려는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의하였다(정기명, 2004). 이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참여’, ‘집회 또는 시위 참가’, ‘노인공약후보자 또는 정당지지 표명’, ‘노인단체 가입활동’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1] 측정항목

구 분		측정항목	문항 수	
정치정향	인지적 정향	나는 노인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서가 어디인지 안다.	4	
		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최근 2년간 현정부가 시행한 노인정책이나 법률이 과거 정부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있다.		
		나는 노인권익신장을 위해 어떤 법률정책이 필요한지 잘 안다.		
	감정적 정향	우리나라 정치사회에서는 대체로 노인들이 대접받는다.	4	
		노인관련 법률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내 마음에 든다.		
		우리나라 정부의 노인관련 정책들이 마음에 든다.		
		나는 노인권익신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평가적 정향	우리나라 노인정책은 대체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노인관련 법률 정책은 민주적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노인정책을 통해 노인문제를 잘 해결했다.		
		나는 노인 권익신장을 위해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정치참여	정보 추구형	나는 신문에서 정치기사를 읽는다.	4	
		나는 TV에서 정치뉴스를 본다.		
		나는 잡지에서 정치기사를 읽는다.		
		나는 가족, 동료, 친구와 정치토론(정답)을 한다.		
	투표형	나는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편이다.	2	
		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는 편이다.		
	선거 유세형	나는 타인에게 특정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4	
		나는 선거유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나는 선거포스터나 팜플렛을 읽은 적이 있다.		
		나는 개인후보나 정당의 선거유세에 협조한 적이 있다.		
	항의형	관계당국이나 언론기관에 전화, 편지, 혹은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4	
		정부관료나 국회의원에게 전화, 편지, 혹은 찾아간 적이 있다.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냈다.		
		관계당국에 여러사람과 함께 항의했다.		
노인권익운동	선거시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4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여 실력행사를 한다.			
	노인정책 후보자 및 정당을 위해 지지운동을 한다.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단체에 가입해 활동해야 한다.			

## 제 4 장 실증분석

### 제 1 절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전국 선택적 지역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설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2011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에 2~3회 실시하였다. 설문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내 노인 종합복지관 이용어르신, 대한노인회소속 시군구지회 회원, 서울 종묘공원 방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으며, 시설 기관장의 협조를 얻고 본 연구자와 면접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2011년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455부 중 설문항목 누락 등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36부를 제외하고 총 419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기술적 통계,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 계수 및 Item total correlation 계수로 확인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은 다차원의 자료를 저차원의 공간에 나타내어 자료가 갖는 특성을 찾아내는 차원축소방법(이순복, 2000)인 주성분분석과 varimax rot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수집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남녀 구성 비율은 남성이 183명으로 43.7%, 여성이 236명으로 56.3%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70세~74세가 139명으로 3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5세~69세가 130명으로 31.0%, 75세~79세가 72명으로 17.2%, 60세~64세가 39명으로 9.3%, 80세~84세가 32명으로 7.6%, 85세 이상이 7명으로 1.7%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 원으로는 부부가 210명으로 가장 많아 50.1%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동거가 122명으로 29.1%, 독거가 63명으로 15.0%, 손주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부/자녀 등과 함께 동거가 24명으로 5.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 111명으로 26.5%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이 106명으로 25.3%, 초등학교 졸업이 105명으로 25.1%, 대학교 졸업 이상이 53명으로 12.6%, 무학이 44명으로 10.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으로는 대도시(광역시 포함)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378명으로 90.2%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36명으로 8.6%, 읍면동이 5명으로 1.2%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수입 분포는 49만 원 이하가 210명으로 50.1%, 50만 원~99만 원이 118명으로 28.2%, 100만 원~149만 원이 51명으로 12.2%, 150만 원~199만 원이 19명으로 4.5%, 200만 원 이상이 21명으로 5.0%로 나타났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항 목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 별	남성	183	43.7
	여성	236	56.3
	계	419	100
연 령	60세~64세	39	9.3
	65세~69세	130	31.0
	70세~74세	139	33.2
	75세~79세	72	17.2
	80세~84세	32	7.6
	85세 이상	7	1.7
	계	419	100
가구 구성원	독거	63	15.0
	부부	210	50.1
	자녀와 동거	122	29.1
	손주 등 기타	24	5.7
	계	419	100
학 력	무학	44	10.5
	초등학교 졸업	105	25.1
	중학교 졸업	106	25.3
	고등학교 졸업	111	26.5
	대학교 졸업 이상	53	12.6
	계	419	100
거주지역	대도시(광역시 포함)	378	90.2
	중소도시	36	8.6
	읍면동	5	1.2
	계	419	100
월 평균 수입	49만 원 이하	210	50.1
	50만 원~99만 원	118	28.2
	100만 원~149만 원	51	12.2
	150만 원~199만 원	19	4.5
	200만 원 이상	21	5.0
	계	419	100

##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치정향, 정치참여와 노인권익운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1) 성별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정치정향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치정향의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 성별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정치정향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인지적 정향	남성	2.750	.899	-3.409	.001***
	여성	3.063	.960		
감정적 정향	남성	2.956	.843	1.751	.081
	여성	2.807	.880		
평가적 정향	남성	2.904	.857	.509	.611
	여성	2.861	.862		

\*\*\*.p<0.005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정향에서 인지적 정향은 t값이 -3.409로 성별에 따라 인지적 정향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각 인지적 정향의 평균값이 2.750, 3.063의 수치를 보여, 여성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감정적 정향과 평가적 정향은 t값이 각각 1.751, 0.509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성별에 따라 정치참여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치참여의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정치참여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정보추구형	남성	2.366	.852	-5.746	.000***
	여성	2.847	.849		
투표형	남성	2.112	1.116	.773	.440
	여성	2.031	1.002		
선거유세형	남성	3.017	.903	-2.434	.015**
	여성	3.230	.878		
항의형	남성	3.833	.937	-.469	.639
	여성	3.876	.915		

\*\*.p<0.05    \*\*\*.p<0.05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참여에서 정보추구형은 t값이 -5.746으로 성별에 따라 정보추구형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거유세형은 t값이 -2.434로 성별에 따라 선거유세형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져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정보추구형의 평균값이 2.366, 2.847의 수치를 보였고, 선거유세형의 평균값은 3.017, 3.230으로 나타나 여성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투표형, 항의형은 t값이 .773, -.469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기각되었다.

### 3) 연령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연령에 따라 정치정향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치정향의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 연령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정치정향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인지적 정향	60~64세	2.724	.983	1.595 / .160
	65~69세	2.855	.867	
	70~74세	2.974	.898	
	75~79세	2.892	1.054	
	80~84세	3.289	1.116	
	85세 이상	3.107	.814	
감정적 정향	60~64세	2.711	.816	.730 / .601
	65~69세	2.942	.917	
	70~74세	2.879	.872	
	75~79세	2.770	.769	
	80~84세	2.945	.858	
	85세 이상	3.035	1.093	
평가적 정향	60~64세	2.788	.876	.658 / .656
	65~69세	2.971	.868	
	70~74세	2.839	.846	
	75~79세	2.802	.794	
	80~84세	2.984	.952	
	85세 이상	2.821	1.152	

연령에 따라 인지적 정향과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유의확률은 각각 0.160, 0.601, 0.656의 수치를 보여 기각되었다.

#### 4) 연령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연령에 따라 정치참여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치참여의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5] 연령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정치참여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정보추구형	60~64세	2.709	.924	.782 / .563
	65~69세	2.730	.917	
	70~74세	2.613	.854	
	75~79세	2.495	.837	
	80~84세	2.625	.914	
	85세 이상	2.476	.899	
투표형	60~64세	2.294	1.316	3.608 / .003***
	65~69세	2.330	1.068	
	70~74세	1.902	.999	
	75~79세	1.930	1.001	
	80~84세	1.750	.707	
	85세 이상	2.000	1.040	
선거유세형	60~64세	2.961	.992	.915 / .471
	65~69세	3.132	.897	
	70~74세	3.095	.863	
	75~79세	3.222	.852	
	80~84세	3.367	1.021	
	85세 이상	3.142	.643	
항의형	60~64세	3.544	1.168	3.371 / .005**
	65~69세	3.673	.917	
	70~74세	3.994	.862	
	75~79세	3.982	.831	
	80~84세	4.109	.941	
	85세 이상	3.857	.775	

\*\*.p<0.05    \*\*\*.p<0.005

분석결과 정보추구형과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의 유의확률은 각각 0.782, 3.608, 0.915, 3.371의 수치를 보여 투표형과 항의형만이 채택되었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투표형에서 65~69세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65~69세를 기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항의형에서는 60~64세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는데, 60~64세를 기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고령이 되면서 신체적 일상활동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 행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5) 학력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학력에 따라 정치정향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학력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치정향의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 학력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정치정향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인지적 정향	무학	3.096	1.090	6.114 / .000***
	초졸	3.262	1.003	
	중졸	2.825	.837	
	고졸	2.777	.886	
	대졸 이상	2.641	.844	
감정적 정향	무학	3.170	.827	1.935 / .104
	초졸	2.878	.913	
	중졸	2.792	.894	
	고졸	2.786	.812	
	대졸 이상	2.952	.823	
평가적 정향	무학	3.346	.929	4.990 / .001***
	초졸	2.969	.918	
	중졸	2.804	.776	
	고졸	2.718	.794	
	대졸 이상	2.806	.843	

\*\*\*.p<0.005

분석결과 유의확률 0.104의 확률은 각각 0.000, 0.001의 수치를 보여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정향은 초등학교 졸업에서, 평가적 정향은 무학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 6) 학력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학력에 따라 정치참여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학력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치참여의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7] 학력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정치참여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정보추구형	무학	2.803	1.017	8.206 / .000***
	초졸	2.892	.920	
	중졸	2.720	.815	
	고졸	2.483	.801	
	대졸 이상	2.150	.741	
투표형	무학	2.556	1.142	5.296 / .000***
	초졸	2.123	1.064	
	중졸	2.188	1.040	
	고졸	1.837	.970	
	대졸 이상	1.783	.978	
선거유세형	무학	3.454	.929	7.094 / .000***
	초졸	3.376	.849	
	중졸	3.169	.847	
	고졸	2.871	.868	
	대졸 이상	2.896	.901	
항의형	무학	3.642	.969	1.533 / .192
	초졸	3.785	1.027	
	중졸	3.832	.950	
	고졸	4.002	.803	
	대졸 이상	3.924	.831	

\*\*\*.p<0.005

분석결과 정보추구형과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의 유의확률은 각 0.000,

0.000, 0.000, 0.192의 수치를 보여 항의형을 제외하고 모두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추구형은 초등학교 졸업, 투표형과 선거유세형은 무학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은 노인일수록 투표, 선거우세참여, 정보추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평균수입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평균수입에 따라 정치정향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치정향의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8] 평균수입에 따른 정치정향 차이분석

정치정향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인지적 정향	0~49만	3.021	1.010	1.634 / .165
	50~99만	2.903	.923	
	100~149만	2.799	.812	
	150~199만	2.710	.625	
	200만 이상	2.607	.857	
감정적 정향	0~49만	2.857	.875	.895 / .467
	50~99만	2.923	.894	
	100~149만	2.970	.804	
	150~199만	2.763	.871	
	200만 이상	2.595	.756	
평가적 정향	0~49만	2.909	.895	2.401 / .049**
	50~99만	2.942	.829	
	100~149만	2.921	.825	
	150~199만	2.434	.644	
	200만 이상	2.535	.771	

\*\*.p<0.05

평균수입에 따라 인지적 정향과 감정적 정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적 정향은 유의확률 0.049의 수치를 보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 인지적 정향과 감정 및 평가적 정향의 유의확률은 각 0.165, 0.467의 수치를 보여 기각되었다.

#### 8) 평균수입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평균수입에 따라 정치참여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치참여의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9] 평균수입에 따른 정치참여 차이분석

정치참여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정보추구형	0~49만	2.733	.843	3.842 / .004***
	50~99만	2.638	.935	
	100~149만	2.516	.817	
	150~199만	2.614	.931	
	200만 이상	1.984	.826	
투표형	0~49만	1.990	1.025	1.032 / .390
	50~99만	2.228	1.069	
	100~149만	2.068	1.005	
	150~199만	2.000	1.154	
	200만 이상	1.976	1.239	
선거유세형	0~49만	3.201	.839	.758 / .553
	50~99만	3.108	.916	
	100~149만	3.068	.964	
	150~199만	3.065	.981	
	200만 이상	2.904	1.062	
항의형	0~49만	3.942	.863	2.307 / .058
	50~99만	3.639	1.028	
	100~149만	3.946	.886	
	150~199만	3.921	.924	
	200만 이상	3.952	.868	

\*\*\*.p<0.005

평균수입에 따라 정보추구형을 제외한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보추구형과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의 유의확률은 각 0.004, 0.390, 0.553, 0.058의 수치를 보여 정보추구형 요인만이 채택되었다. 즉, 평균수입이 낮은 노인일수록 신문, 뉴스, 주변인들에 게서 관심 관련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제 2 절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 1. 타당성 분석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특정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 도구가 그 속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아무리 측정값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측정된 값 자체가 다른 속성이나 다른 개념을 측정한 것이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실질적인 유효성을 높이고 설문항목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들끼리 묶어주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PCA)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회전방식 중에서 요인의 해석이 가장 용이한 Varimax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여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이 0.6 이상인 값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인적재값이 0.6 미만으로 나타난 1개(IP4)를 제거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10]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	평가 항목	요인분석			항목 수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	고유치 (eigen value)	총 분산 (% of variance)	최초	최종
인지적 정향		RA2	.944	3.665	30.543	4	4
		RA4	.716				
		RA3	.898				
		RA1	.803				
감정적 정향		FA1	.935	2.687	22.389	4	4
		FA2	.874				
		FA3	.815				
		FA4	.974				
평가적 정향		EA4	.959	1.684	14.030	4	4
		EA1	.918				
		EA2	.905				
		EA3	.901				
정치 참여	정보추구형	IP1	.847	1.889	14.527	4	3
		IP3	.795				
		IP2	.680				
	투표형	VO1	.899	1.984	15.258	2	2
		VO2	.899				
	선거유세형	CA2	.809	2.287	17.589	4	4
		CA1	.727				
		CA4	.679				
		CA3	.614				
	항의형	CO3	.874	3.186	24.509	4	4
		CO4	.862				
		CO2	.820				
		CO1	.761				
노인권익운동		SRC2	.935	2.162	54.044	4	4
		SRC4	.922				
		SRC1	.999				
		SRC3	.905				

## 2. 신뢰성 분석

신뢰성(reliability)이란 한 대상을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측정을 반복하였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0.6 미만일 경우 내적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 변수들의 신뢰성을 본다면 Cronbach's  $\alpha$  값은 0.637~0.891로 나타나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신뢰성 검증 결과

개념	요인	측정항목	항목 삭제된 경우 (a)	신뢰성계수 (a)
인지적 정향		RA1	.810	.822
		RA2	.729	
		RA3	.789	
		RA4	.774	
감정적 정향		FA1	.716	.769
		FA2	.663	
		FA3	.661	
		FA4	.801	
평가적 정향		EA1	.740	.799
		EA2	.724	
		EA3	.717	
		EA4	.809	
정치참여	정보추구형	IP1	.456	.706
		IP2	.696	
		IP3	.654	
	투표형	VO1	.	.871
		VO2	.	
	선거유세형	CA1	.660	.745
		CA2	.600	
		CA3	.781	
		CA4	.675	
	항의형	CO1	.873	.891
		CO2	.850	
		CO3	.849	
		CO4	.869	
노인권익운동		SRC1	.804	.637
		SRC2	.462	
		SRC3	.407	
		SRC4	.407	

### 제 3 절 연구가설의 검증

#### 1. 정치정향과 노인권익운동

본 연구에서는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정치정향의 구성요인인 인지적 정향과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인권익운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제시되는 다중회귀모형의 기본 회귀식은 아래와 같으며, 활용된 분석도구는 SPSS 19.0을 사용하였다.

$$Y_i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epsilon_i$$

$Y_i$  = 노인권익운동,  $\alpha$  = 상수,  $\epsilon_i$  = 잔차

$X_1$  = 인지적 정향,  $X_2$  = 감정적 정향,  $X_3$  = 평가적 정향

정치정향 요인, 종속변수는 총합척도(summated scale)를 이용하여 단일변수로 하여 모형에 가설검증모형으로 사용하였다. 총합척도는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값이 높은 경우, 변수들의 합 또는 변수들의 합에 대한 평균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오차의 정도를 줄여주고 단일변수로서 많은 측면으로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장점을 지닌다(Hair et al., 1998; 김계수, 2001; 강희일, 2002).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측정항목의 평균값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요인 간 상관행렬은 다음의 [표 4-12]와 같다.

[표 4-12] 요인 간 상관행렬(1)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	노인권익운동
인지적 정향	1			
감정적 정향	.384**	1		
평가적 정향	.460**	.753**	1	
노인권익운동	.447**	.264**	.295**	1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예측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행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정치정향 요

인과 노인권익운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검증을 위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치정향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인권익운동의 구성 요인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도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정치정향 요인으로는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1, H1-2, H1-3 모두 채택되었다. 모형 적합도에서 회귀모형의 F 값은 37.209(유의확률 0.000)이었으며,  $R^2 = 0.212$ (수정된  $R^2 = 0.207$ )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노인권익운동에 대하여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4-13] 정치정향과 노인권익운동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공차
노인권익운동	(상수)	.140		12.259	.000	
	인지적 정향 (H1-1)	.041	.391	7.942	.000***	.785
	감정적 정향 (H1-2)	.060	.063	.946	.045**	.432
	평가적 정향 (H1-3)	.063	.070	1.014	.011**	.399
R=.461, $R^2=.212$ , 수정된 $R^2=.207$ , F=37.209, p=.000, Durbin-Watson=1.836						

\*\*.p<0.05    \*\*\*.p<0.005

## 2.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정향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정치정향의 구성요인인 인지적 정향과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제시되는 다중회귀모형의 기본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Y_i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epsilon_i$$

$Y_i$  = 정치참여,  $\alpha$  = 상수,  $\epsilon_i$  = 잔차

$X_1$  = 인지적 정향,  $X_2$  = 감정적 정향,  $X_3$  = 평가적 정향

[표 4-14] 요인 간 상관행렬(2)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	정치참여
인지적 정향	1			
감정적 정향	.384**	1		
평가적 정향	.460**	.753**	1	
정치참여	.527**	.387**	.410**	1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본 연구에서도 정치정향 요인과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검증을 위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치정향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치참여와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도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정치정향 요인으로는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1, H2-2가 채택되었다. 모형 적합도에서 회귀모형의 F 값은 65.716(유의확률 0.000)이었으며,  $R^2 = 0.323$ (수정된  $R^2 = 0.318$ )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정치참여에 대하여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4-15]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공차
정치참여	(상수)	.092		18.778	.000	
	인지적 정향 (H2-1)	.027	.423	9.259	.000***	.785
	감정적 정향 (H2-2)	.040	.143	2.327	.020**	.432
	평가적 정향 (H2-3)	.042	.108	1.685	.093	.399
R=.568, R <sup>2</sup> =.323, 수정된 R <sup>2</sup> =.318, F=65.716, p=.000, Durbin-Watson=1.779						

\*\*.p<0.05    \*\*\*.p<0.005

### 3. 정치참여와 노인권익운동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가 노인권익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정치참여의 구성요인인 정보추구형과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인권익운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제시되는 다중회귀모형의 기본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Y_i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epsilon_i$$

$Y_i$  = 노인권익운동,  $\alpha$  = 상수,  $\epsilon_i$  = 잔차

$X_1$  = 정보추구형,  $X_2$  = 투표형,  $X_3$  = 선거유세형,  $X_4$  = 항의형

[표 4-16] 요인 간 상관행렬(3)

	정보추구형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	노인권익운동
정보추구형	1				
투표형	.208**	1			
선거유세형	.257**	.154**	1		
항의형	.100*	-.303**	.481**	1	
노인권익운동	.295**	.026	.561**	.498**	1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본 연구에서도 정치정향 요인과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투표형과 항의형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검증을 위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치참여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인권익운동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도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정치참여 요인으로는 정보추구형, 선거유세형, 항의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1, H3-3, H3-4가 채택되었다. 모형 적합도에서 회귀모형의 F 값은 71.960 (유의확률 0.000)이었으며,  $R^2 = 0.410$ (수정된  $R^2 = 0.404$ )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노인권익운동에 대하여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4-17] 정치참여와 노인권익운동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공차
노인권익운동	(상수)	.171		3.130	.002	
	정보추구형 (H3-1)	.035	.164	4.116	.000***	.902
	투표형 (H3-2)	.032	.033	.770	.442	.765
	선거유세형 (H3-3)	.041	.360	7.711	.000**	.652
	항의형 (H3-4)	.041	.319	6.656	.000**	.621
$R=.640, R^2=.410$ , 수정된 $R^2=.404$ , $F=71.960, p=.000$ , Durbin-Watson=1.942						

\*\*\*.p<0.005

#### 4. 정치참여의 조절효과분석

정치정향과 노인권익운동과의 관계, 역학적인 관계에서 정치참여 요인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변수 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의 검증에 주로 사용하는 계층적 의사결정(Hierarchical Regression)을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이 주로 회귀모형 자체의 검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반면 계층적 회귀분석은 개별 변수의 상대적인 효과의 검증이나 변수 간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을 통하여 상호작용 효과와 직접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립변수인 정치정향, 조절변수인 정치참여, 종속변수인 노인권익운동은 총 합척도(Summated Scale)를 이용하여 단일변수로 하여 모형에 가설검증모형으로 사용하였다.

정치정향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에 의해 노인권익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정의 형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설 H4를 추정하기 위하여 추정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 = \beta_0 + \beta_i X_i + \gamma_i Z_i + \delta X_i Z_i + \epsilon_i$$

$Y$  = 노인권익운동

$\beta, \gamma, \delta$  = 회귀계수

$X_i$  = 정치정향

$Z$  = 정치참여 ( $i = 1$ : 정보추구형,  $2$ : 투표형,  $3$ : 선거유세형,  $4$ : 항의형)

정치참여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먼저 종속변수로 노인권익운동을 입력하고, 1단계는 독립변수인 정치정향 변수를 입력하고, 2단계는 조절변수인 정치참여의 4개 요인 전체를 입력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정향과 정치참여의 각 변수를 곱하여 상호작용 변수를 생성한 후 개별 변수들을 차례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18]과 같다.



[표 4-18] 정치참여 조절회귀분석 결과 (1)

구 분	요 인	표준 오차	$\beta$	t	F	$R^2$ (수정된 $R^2$ )	유의확률 F 변화량
1단계 (독립)	인지적 정향	.037	.447	10.201	104.055	.200 (.198)	.000
2단계 (조절)	정보추구형	.043	.132	2.758	56.658	.214 (.211)	.006
	투표형	.033	-.007	-.157	51.918	.200 (.196)	.876
	선거유세형	.038	.452	10.473	120.459	.367 (.364)	.000
	항의형	.037	.387	8.892	101.322	.328 (.325)	.000
3단계 (상호작용)	인지적 정향 × 정보추구형	.037	-.047	-.226	37.703	.215 (.209)	.821
	인지적 정향 × 투표형	.038	.607	3.352	39.209	.221 (.216)	.001
	인지적 정향 × 선거유세형	.033	.070	.344	80.175	.367 (.363)	.731
	인지적 정향 × 항의형	.038	-.188	-.710	67.635	.329 (.324)	.478

분석결과 인지적 정향과 노인권익운동 사이에서 정치참여 요인인 정보추구형,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 모두 유의하지 않은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변화량도 각각 1.4%, 0%, 16.7%, 12.8%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계층적 회귀분석의 경우는 개별 변수들을 하나씩 입력시키면서 전체 모형 설명력의 변화량을 통해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추출하는데, 인지적 정향과 노인권익운동 사이에서의 정치참여 요인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정치참여 조절회귀분석 결과 (2)

구 분	요 인	표준 오차	$\beta$	t	F	$R^2$ (수정된 $R^2$ )	유의확률 F 변화량
1단계 (독립)	감정적 정향	.043	.264	5.586	31.204	.070 (.067)	.000
2단계 (조절)	정보추구형	.042	.248	5.277	30.531	.128 (.124)	.000
	투표형	.036	-.034	-.708	15.834	.071 (.066)	.479
	선거유세형	.037	.531	12.463	99.034	.323 (.319)	.000
	항의형	.036	.469	11.152	82.405	.284 (.280)	.000
3단계 (상호작용)	감정적 정향 × 정보추구형	.043	-.045	-.208	20.321	.128 (.122)	.835
	감정적 정향 × 투표형	.041	.160	.765	10.741	.072 (.065)	.445
	감정적 정향 × 선거유세형	.036	-.201	-.978	66.335	.324 (.319)	.328
	감정적 정향 × 항의형	.041	.196	.784	55.090	.285 (.280)	.433

분석결과 감정적 정향과 노인권익운동 사이에서 정치참여 요인인 정보추구형,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 모두 유의하지 않은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변화량도 각각 5.8%, 0.1%, 25.3%, 21.4%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계층적 회귀분석의 경우는 개별 변수들을 하나씩 입력시키면서 전체 모형 설명력의 변화량을 통해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추출하는데, 감정적 정향과 노인권익운동 사이에서의 정치참여 요인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정치참여 조절회귀분석 결과 (3)

구 분	요 인	표준 오차	$\beta$	t	F	$R^2$ (수정된 $R^2$ )	유의확률 F 변화량
1단계 (독립)	평가적 정향	.043	.295	6.306	39.766	.087 (.085)	.000
2단계 (조절)	정보추구형	.042	.238	5.087	34.009	.141 (.136)	.000
	투표형	.036	-.040	-.834	20.216	.089 (.084)	.405
	선거유세형	.038	.523	12.068	99.597	.324 (.321)	.000
	항의형	.035	.463	11.108	87.411	.296 (.293)	.000
3단계 (상호작용)	평가적 정향 × 정보추구형	.039	.346	1.746	23.800	.147 (.141)	.082
	평가적 정향 × 투표형	.039	.232	1.144	13.924	.091 (.085)	.253
	평가적 정향 × 선거유세형	.035	-.152	-.755	66.519	.325 (.320)	.451
	평가적 정향 × 항의형	.039	-.109	-.461	58.234	.296 (.291)	.645

분석결과 평가적 정향과 노인권익운동 사이에서 정치참여 요인인 정보추구형,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 모두 유의하지 않은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변화량도 각각 5.4%, 0.2%, 23.7%, 20.9%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계층적 회귀분석의 경우는 개별 변수들을 하나씩 입력시키면서 전체 모형 설명력의 변화량을 통해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추출하는데, 평가적 정향과 노인권익운동 사이에서의 정치참여 요인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4 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이상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노인권익운동과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정치정향 요인으로는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 요인이 유의수준  $p<0.05$  이하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과 H2-1, H2-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권익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정치참여 요인으로는 투표형을 제외한 정보추구형, 선거유세형, 항의형 요인이 유의수준  $p<0.005$  이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연구모형검증 및 가설채택 (1)

가설	분석 방법	판단기준		가설 채택
		$\beta$	t 값 (유의도)	
H1: 정치정향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 귀 분 석			
H1-1: 인지적 정향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391	7.942	채택
H1-2: 감정적 정향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063	.946	채택
H1-3: 평가적 정향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070	1.014	채택
H2: 정치정향은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인지적 정향은 정치참여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3	9.259	채택
H2-2: 감정적 정향은 정치참여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3	2.327	채택
H2-3: 평가적 정향은 정치참여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8	1.685	기각
H3: 정치참여는 유형에 따라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정보추구형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4	4.116	채택
H3-2: 투표형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033	.770	기각

칠 것이다. H3-3: 선거유세형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항의형은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60	7.711	채택
		.319	6.656	채택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정치참여 요인의 조절회귀분석 검증결과 인지적 정향과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의 모든 요인이 노인권익운동에 대하여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 H5, H6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연구모형검증 및 가설채택 (2)

가설	분석 방법	판단기준				가설 채택	
		2단계		3단계			
		$\beta$	$R^2$ 변화량	$\beta$	$R^2$ 변화량		
H4: 정치참여 요인은 인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H4-1: 정보추구형은 인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계 총 적	.132	$\Delta 0.014$	-.047	$\Delta 0.015$	기각	
H4-2: 투표형은 인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회 귀 분 석	-.007	$\Delta 0.000$	.607	$\Delta 0.021$	기각	
H4-3: 선거유세형은 인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회 귀 분 석	.452	$\Delta 0.167$	.070	$\Delta 0.167$	기각	
H4-4: 항의형은 인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회 귀 분 석	.387	$\Delta 0.128$	-.188	$\Delta 0.129$	기각	
H5: 정치참여 요인은 감정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H5-1: 정보추구형은 감정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248	$\triangle 0.058$	-.045	$\triangle 0.058$	기각
H5-2: 투표형은 감정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034	$\triangle 0.001$	.160	$\triangle 0.002$	기각
H5-3: 선거유세형은 감정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531	$\triangle 0.253$	-.201	$\triangle 0.254$	기각
H5-4: 항의형은 감정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469	$\triangle 0.214$	.196	$\triangle 0.215$	기각
<b>H6: 정치참여 요인은 평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b>						
H6-1: 정보추구형은 평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238	$\triangle 0.054$	.346	$\triangle 0.060$	기각
H6-2: 투표형은 평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040	$\triangle 0.002$	.232	$\triangle 0.004$	기각
H6-3: 선거유세형은 평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523	$\triangle 0.237$	-.152	$\triangle 0.238$	기각
H6-4: 항의형은 평가적 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463	$\triangle 0.209$	-.109	$\triangle 0.209$	기각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오늘날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인집단의 사회정치적 중요성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현재의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노인은 스스로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화두로 삼은 것이다.

모름지기 정치문화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정치양태를 결정짓는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정치문화가 그동안 학자들 간에 관심이 높아졌던 것은 전통적인 정치학의 연구방법인 철학적, 역사적, 법률적, 제도적 방법론으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성된 개발도상국들의 정치형태를 구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교정치적 차원에서 그 나라의 경험적 신념, 현재적 상징 및 가치체계 등을 연구하기 시작한데서 비롯되었다.

정치문화는 사실 정치체제— 제도와 기구의 기능, 공공정책의 효율성 등과 같은 거시정치학(Macro-politics)과 개인과 사회집단의 심리적 경향과 태도에 초점을 두는 미시정치학(Micro-politics)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간의 전통학문인 사회학과 심리학 등을 정치학에 접목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개인과 집단의 심층심리의 연구결과와 조직구성원 간의 사회학적 분석방법을 동태적인 정치분석에 적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치문화의 개념이 생성된 것이다.

Almond와 Verba(1963)는 영국, 미국, 서독, 이태리, 멕시코 등 5개국의 정치문화를 비교연구한 결과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향리형(鄉里型) 정치문화(Parochial Political Culture)로서 이 사회의 주민들은 접촉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것을 초월한 국가, 민족, 정치현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매스컴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나타내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신민형(臣民型) 정치문화로서 수동적, 복종형의 양태를 나타내는

주민들이며, 이들은 전근대적 정치의식, 권위주의적 정치의식이 특징이다. 이들은 정치적 산출기능에만 정치적 정향을 가질 뿐이고, 투입가능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치적 정향이 없다.

셋째는 참여형 정치문화이다. 이는 주민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주민들이 정치체제와 그들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전통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도시와 농촌의 양극적 정치문화현상이다. 농촌주민은 권위주의적·정치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대도시를 비롯한 중소도시 주민들은 부정적 태도를 선호한다. 이것은 농촌주민들의 목종성향, 의인(擬人)주의 성향, 형식주의 성향이 권위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농촌과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육수준느 매스 미디어의 접촉관계, 유교적 전통의 잔존유무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둘째, 세대 간 정치문화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정치문화에 있어 세대 간의 격차문제는 K. Mannheim(1952)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후 정치태도, 정치참여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인정되어 온 개념이다. 정치적 세대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경험과 사회화를 거친 연령층을 말하며 이러한 유사함 때문에 정치적인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령층을 말한다. 연령층의 문제는 같은 연령의 세대가 겪은 정치적 변혁이나 정치적 사태를 매개로 하여 정치적인 관행이나 신념 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Lane, 1959).

현재 한국의 20대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태어난 세대이다. 이들의 근대화는 경제개발의 초기시기에 태어난 민주화라는 정치변혁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이다. 이들은 정치문화적 가치관은 현재 60, 70대의 노인들과는 엄청난 세대차를 나타낸다. 이것은 세대가 경험한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심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성(性)에 따른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한국사회는 정치의 영역은 남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그런 관계로 여성 정치인, 여성 사회활동가가 지극히 드물었고, 여성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사

실과 이에 여성에 대하여 묵종(默從)적이고 순응적인 것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적 환경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관계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수동적이고, 다수의 의사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의사의 표명을 유보시킨다든가, 소수의 견해를 다수에 대항시켜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여성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은 여성들의 의식의 전환은 물론 자신의 위상과 이익을 주장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는 교육수준에 따른 정치문화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인구가 확대될수록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고, 정치의식도 상승되며,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인 상호신뢰, 관용성, 개인의 권리의식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묵종적 가치에 부정적인 반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권위주의, 형식주의, 비판정신에 있어 스스로의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의 정치문화를 살펴보았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정치문화는 단순하게 확정하여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혼합문화성을 가진 다양한 하위문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민 사이에서의 정치의식 간의 격차, 20~30대와 60~70대 세대 간에 존재하는 정치정향의 이질화, 교육수준에 따른 정치정향의 이견 등은 한국정치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이런 요소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발전의 잠재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적 과제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정치정향의 구성요인인 인지적 정향과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인권익운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제시되는 다중회귀모형의 기본 회귀식은 아래와 같으며, 활용된 분석도구는 SPSS 19.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측정항목의 평균값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예측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행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정치정향 요인과 노인권익운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검증을 위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치정향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인권익운동의 구성 요인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도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정치정향 요인으로는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1, H1-2, H1-3 모두 채택되었다. 모형 적합도에서 회귀모형의 F 값은 37.209(유의확률 0.000)이었으며,  $R^2 = 0.212$ (수정된  $R^2 = 0.207$ )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노인권익운동에 대하여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정향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정치정향의 구성요인인 인지적 정향과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제시되는 다중회귀모형의 기본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Y_i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epsilon_i$$

$Y_i$  = 정치참여,  $\alpha$  = 상수,  $\epsilon_i$  = 잔차

$X_1$  = 인지적 정향,  $X_2$  = 감정적 정향,  $X_3$  = 평가적 정향

본 연구에서도 정치정향 요인과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검증을 위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치정향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치참여와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도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정치정향 요인으로는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1, H2-2가 채택되었다. 모형 적합도에서 회귀모형의 F 값은 65.716(유의확률 0.000)이었으며,  $R^2 = 0.323$ (수정된  $R^2 = 0.318$ )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정치참여에 대하여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가 노인권익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정치참여의 구성요인인 정보추구형과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인권익운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제시되는 다중회귀모형의 기본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Y_i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epsilon_i$$

$Y_i$  = 노인권익운동,  $\alpha$  = 상수,  $\epsilon_i$  = 잔차

$X_1$  = 정보추구형,  $X_2$  = 투표형,  $X_3$  = 선거유세형,  $X_4$  = 항의형

본 연구에서도 정치정향 요인과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투표형과 항의형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검증을 위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치참여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인권익운동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도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노인권익운동의 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정치참여 요인으로는 정보추구형, 선거유세형, 항의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1, H3-3, H3-4가 채택되었다. 모형 적합도에서 회귀모형의 F 값은 71.960 (유의확률 0.000)이었으며,  $R^2 = 0.410$ (수정된  $R^2 = 0.404$ )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노인권익운동에 대하여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권익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정향과 정치참여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치정향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가설에서 설정한 것처럼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 3가지 그대로 분류되었고, 3가지 요인 모두 부분적으로 노인권익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향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현재의 정책과 법

률은 선거에서의 투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노인층의 지지표명이나 노인 단체 가입활동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로서의 권익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정향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노인의 권리신장역할을 위해 집회나 시위, 지지표명, 노인 단체 가입활동 등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권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적 정향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현 정책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정책이 입안되는지 여부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적인 정책입안과 노인 권리신장을 위한 역할수행은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표명, 노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를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또한 현 정책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정책이 입안되는지 여부가 투표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의 노인정책이나 법률, 노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선거유세형과 항의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입안과정과 권리신장을 위한 역할/수행은 선거유세형과 항의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투표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지만, 앞으로의 노인 권리위한 활동에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 지지를 표명하거나 권리신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치정향과 노인권익운동, 정치참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정치참여와 노인권익운동 등 2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변수들을 함께 다루어 정치참여의 조절효과를 입증하려 했으나 부분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치참여 형태는 노인권익운동에 대해 독립변수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정향과의 상호작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제 2 절 정책적 제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이끌어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에서는 노인권익운동에 중요한 요인인 인지적 정향과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 모두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속적인 표심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현재의 정책이나 법률이 불합리하다면, 시급히 개선해야 노인층의 높은 지지와 참여로 인해 보다 발전된 권익운동으로 변모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법률개선, 정책입안 과정에서의 민주적인 방법을 활용하는데 관심과 노력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제언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이익단체의 노인권익운동으로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도기적 한국정치적 사회적 구조속에서 노인들의 문제를 권익운동을 주관하는 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할 때 사회의 갈등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것에 기여할 것이다. 과거의 연구에서 보면 노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향리형 정치문화 내지 신민형 정치문화의 테두리를 벗어나 과감하게 참여형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연구에서는 참여형 정치문화에 한층 접근된 것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권익운동을 실천하는 단체는 비정부기구(NGO)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노인회, 한구노년유권자연맹, 한국노년학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에서 대한노인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와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는 NGO로 분류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대한노인회는 정부 당국에 저소득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의 확대와 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또 전국 53,000개소 경로당에 급식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점심 굽는 노인들의 문제해결과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과를 노인복지국으로의 승격요구, 경로효친사상을 전달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국민계도사업 추진 요구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정부 상대의 다양한 이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노년학회에서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노인문제와 관련된 각종 이슈를 주제로 전문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권인운동 관련단체의 활동은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에 미달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노인관련 단체들이 원활한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인권익운동을 이끄는 NGO끼리의 상호 연대활동의 강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추진력 강화, 다양한 재원의 확보, 강력한 리더십 및 지도자 선출, 대정부 로비력 강화, 대의회 진출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입법부에의 접근활동의 구체화이다.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고, 둘째는 그 문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간의 세력관계, 영향 예측 등 정치적 지식이다. 국회의원은 첫 번째의 지식에 대하여 그 배경, 문제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 불충분하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관련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그 정보란 어느 의원이 어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의 출신 선거구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의원간의 단결력은 어떠하며 위원간의 이해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타협의 가능성은 있는지 등이다

그리고 의원에 대한 변첩, 설득, 장시간의 대담, 세미나 초청 등으로 의원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 하나는 출신 선거구의 이해 당사자를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는 노인단체가 정치과정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높은 투표율 노인층 시민의 자존 의식으로 노인 스스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등에 관하여 스스로 연구하고 행동을 취해왔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사회보장, 노인복지법, 보건의료제도에 막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또 하나는 연령에 기초한 조직력의 강화이다.

미국의 노인들은 미국퇴직자 연합회(AARP), 국가노인대책위원회(NCOA), 국가 은퇴자 고용촉진 연합회(NARFE), 노인 시민을 위한 국가위원회(NCSC), 인디언 노령자를 위한 국가위원회(NICOA), 히스패닉 노령자를 위한 국가위원회(NHCOA), 흑인 노인을 위한 국가위원회, 노령 여성을 위한 조직(OWL), 사회보장 및 의료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위원회(NCPSSM) 등 많은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은 사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행정부와의 긴밀한 접촉과 정책결정과정의 적극적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은 고도로 집권적, 권위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비공개적이며 내밀적이다. 주요한 정책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군부 엘리트와 기술 관료들은 기술적 합리성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조정, 통합시키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또 정부의 자원 배분정치는 주로 개별이익에 대한 선택적 특혜라는 형식으로 전개되었으며 결사적 집단이익 표출을 어렵게 하였다 (장달중, 1985).

최근에 들어서 시민운동단체들의 주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책 결정과정은 아직도 다원주의(Pluralism)가 아니라 엘리트주의(Elitism)라고 할 수 있다.

현대는 행정국가체제이다. 행정국가라 하면 우선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수립, 집행,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권리문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노인의 문제를 관료가 행정에 반영하는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정부나 의회에서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가 활발한 역할을 한다해도 복잡하고 수많은 정보를 독점할 수 없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협의회나 회의에의 참석, 자문위원회에의 참석, 공무원 임면에의 관여, 노인권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의 권한의 위임과 양보, 법률집행의 참여 등이다.

넷째, 여론 및 노인 스스로의 자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노인권익운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타 집단과의 연합, 동조자, 동조가능자 심지어 무관심자에 이르기까지 동원하거나 접근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광고의 이용, 라디오, TV, 강연, 신문 및 잡지에 기사제공, 팜플렛 배포, 정치인의 발언 등으로 여론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의 노인의 자의식은 조직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재정력이 빈곤하다 할지라도 자의식이 높으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동성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집단활동의 제약 요인 중 회원들의 의식결핍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권익운동을 하는 방법중에 구성원들의 이익추구 활동을 위해 각종 행사를 통하여 정치교육을 할 수 있다. 노인권익단체의 정책과 각종 홍보물을 통해 국민들에게 경로효친의 사상과 노인권위를 확인시켜주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도 스스로 국가 사회 및 자녀세대를 위하여 봉사를 한다는 기본철학을 전제로 노인 권익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운동이 자칫 노인에 대한 특혜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운동이 된다면, 도덕적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향후 발전시키고 모색하여 할 노인권익운동의 실천적 방법으로 네가지의 제언을 제시하면서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권익운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치참여, 노인권익운동에 대한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에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의 수집에 있어 최대한 전체 노인 연령대의 고른 수집을 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표본을 얻기 쉬운 수도권에 거주하고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60, 70대 노인들에 치중되어 조사대상자가 일반화되지 못했다. 특히 상

대적으로 고연령층인 80대에 대한 자료와 지방 중소도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얻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노인 연령대와 거주 지역에 대한 표본 확보를 통하여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특성을 비교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변수로 정치정향, 정치참여를 사용하였지만 향후 연구에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세분화된 과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희일, 「e-Service 품질측정에 관한 연구: 척도개발과 실증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권중돈,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4.
- 김교연,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실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계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품질 전략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31권, 제1호, pp. 191-209, 2001.
- 김영래,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국가와의 관계」, 서울세계NGO대회발표논문집, 1999.
- 김운태 외,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94.
- 박명화 외,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9.
- 박종민, 「한국에서 비선거적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pp. 163-182, 1994.
- 박재간,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세종출판사, 1999.
- 신명순, 『한국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3.
- 안기성, 『교육정치학: 교육과 정치체제』 서울: 양서원, 1997.
- 어수영 · 과진영, 『한국인의 정치 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남성과 여성의 참여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2000.
- 윤형섭 · 김영래, 「한국 이익집단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제1호, pp. 39-80, 1989.
- 이범준 외, 『정치학』, 서울: 박영사, 1986.
- 이순목,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0.
- 이인수,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1999.

- 이정식, 『한국 정치상황의 제 단면』, 서울: 고려원, 1983.
-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5.
- 정기명,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법 개정과정을 중심 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주복,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정치정향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한배호 · 어수영, 『한국정치문화』, 서울: 법문사, 1987.
- 홍성만, 「한국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아세아연구, 45, 2002.
- 황진수, 「우리나라 노인권의 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 6, 1999.
- 황진수, 『노인복지 정책론』,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5.
- 황진수외,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1

## 2. 국외문헌

- AARP, Baby Boomers Envision Their Retirement: An AARP Segmentation Analysis, Washington, D.C.: AARP, 1999.
- Almond, G. A., Comparative Political System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18, No. 3, 1963, pp. 391-409.
- Almond, G. A. and S.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NJ :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3.
- Easton, D. and J. Dennis,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Political Effic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1, No. 1, 1967, pp. 25-38.
- Hair, J. F. and R. E. Anderson and R. L. Tatham and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NJ: Prentice Hall Inc., 1998.
- Milbrath, L.,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65.

- Milbrath, L. and M. Goel,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Boston,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7.
- Parsons, T. and E. A. Shil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MA :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1.
- Platz, M. & N. F. Petersen, The Social Integration of Older People in Denmark, In A. Walker(ed) Older People in Europe: Social Integration.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DGV : 46-74, 1995.
- Sodei, T., Tradition Inpedes Organizational Empowerment, In Thursz, D. et al., (Ed), Empowering Older People, Westport, CT: Auburn House, 1995.
- U.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13th edi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3.
- Walker, A., The Politics of Old Age in Europ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9.
- Walker, A., Whither the social contract?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Income and Employment, In Chapter 2, D. Hobman(ed.) Uniting Generations. Studies in Conflict and Corporation. London: Age Concern England, 1993.

### <웹사이트>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nec.go.kr>

## 【부 록】 설문지

### 설 문 지

#### 한국 노인의 정치정향이 노인권익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한국 노인의 정치정향과 노인권익운동에 관한 어르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르신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질문 사항은 연구의 목적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의 노인권익운동에 관하여 쓰는 것으로 노인권익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지도교수 : 황 진 수  
연 구 자 : 이 미 성  
연 락 처 : 02-3783-1861~3  
이 메 일 : sb-lms@hanmail.net

I. 다음은 어르신의 정치정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르신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번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b>인지적 정향</b>					
1. 나는 노인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서가 어디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최근 2년간 현정부가 시행한 노인정책이나 법률이 과거 정부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노인권익신장을 위해 어떤 법률정책이 필요한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b>감정적 정향</b>					
5. 우리나라 정치사회에서는 대체로 노인들이 대접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노인관련 법률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나라 정부의 노인관련 정책들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노인권익신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b>평가적 정향</b>					
9. 우리나라 노인정책은 대체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나라 노인관련 법률 정책은 민주적으로 만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나라는 노인정책을 통해 노인문제를 잘 해결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노인 권익신장을 위해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어르신의 평소 정치적 태도 및 참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b>&lt;정보추구형&gt;</b>					
13. 나는 신문에서 정치기사를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TV에서 정치뉴스를 본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잡지에서 정치기사를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가족, 동료, 친구와 정치토론(정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b>&lt;투표형&gt;</b>					
17. 나는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b>&lt;선거유세형&gt;</b>					
19. 나는 타인에게 특정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선거유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선거포스터나 팜플렛을 읽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개인후보나 정당의 선거유세에 협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b>&lt;항의형&gt;</b>					
23. 관계당국이나 언론기관에 전화, 편지, 혹은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정부관료나 국회의원에게 전화, 편지, 혹은 찾아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냈다.	①	②	③	④	⑤
26. 관계당국에 여러사람과 함께 항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효율적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선거시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여 실력행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노인정책 후보자 및 정당을 위해 지지운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단체에 가입해 활동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어르신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3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60~64세 ② 65~69세 ③ 70~74세 ④ 75~79세 ⑤ 80~84세 ⑥ 85세 이상

33. 귀하의 가족사항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독거 ② 부부 ③ 자식과 동거 ④ 손자 등 기타(      )

34. 귀하의 학력사항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이상

35. 귀하가 살고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대도시(광역시 포함) ② 중소도시 ③ 읍면동

36. 귀하의 평균수입(용돈)은 얼마입니까?

- ① 0~49만 ② 50~99만 ③ 100~149만 ④ 150~199만 ⑤ 200만 이상

## **ABSTRACT**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n Elderly People's Political Orientation on the Movements for Right**

**Lee, Mi sung**

**Major in Policy Scienc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n Korea, the socio-political importance of elderly group is increasing rapidly in the result of aging phenomenon at an unprecedented pace in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olitical attitude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by analyzing the effect on the movement for the aged people's right and the correlation and power of political orientation between rights campaign in view of culture.

Furthermore, the research diagnoses a situation of the movement for aged people's right in Korea and addresses the specific direction of the action which makes elderly groups lead the flow of public opinion and have a position as great voters to exert pressure to policy makers.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factors organizing political orientations, all three elements – Cognitive orientation, Affective orientation, and Evaluative

orientation — have an effect on the movement for the aged people's right partially. According to cognitive orientation research, present policies and law doesn't affect the vote, but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right actions as voters because it contributes to demonstration of support or joining elderly groups. Secondly, affective orientation is also influential by working on positive lines through active actions such as rally or demonstration, expressing support, and joining groups. Finally, evaluative orien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protests or rally, and joining groups, through diagnosis and evaluation of the present policies and democratic policy-making.

Through this examination, it reveals that present evaluation of the policy is expressed by the vote, the passive ways, but future movements for the elderly people's rights should focus on making a use of active methods like participation in the demonstration or rallies, declaring support or playing a role for the protection and increase of rights.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plans for the support to vitalize the elderly interest groups as a movement for the right, contact ways with legislature and administration, and inspiration of the aged people's sense of identity.

**【Keywords】** political orientation, movement for the aged people's right

